



미국
20만 명이 우익에 맞서
결집하다

▶ 6면

물가 폭등
노동자 소득에 대한 강탈

▶ 4면

중국
류사오보를 석방하라

▶ 12면

동성애 혐오
우익의 악선동이
노리는 것

▶ 5, 15면

발행인_ 김인식 편집인_ 김재현
인쇄인_ (주)아이피디 이송철
등록번호_ 서울다08179 (격주간)
등록연월일_ 2009년 1월 12일
주소_ 서울시 중구 남창동 205-146 2층
전화_ 02-777-2792 팩스_ 02-777-0211
제보_ 02-777-2791 E-Mail_ left21@left21.com

ISSN 2005-8217
917720051821003 41

Left21.com

2010년 10월 16일 ~ 10월 29일 | 제42호 | 값 1,800원

리프트21

G20 지배자들에게 우리의 분노를 보여 주자

이명박의 G20 홍보 총력전에 맞서 G20대응민중행동도 G20 항의 운동 건설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만화로 보는 G20, 정부의 G20 홍보 논리를 비판하는 영상물, 홍보물 등을 제작해 왜 G20에 항의해야 하는지를 널리 알려 나가고 있다.

10월 20일에는 정부 쪽 G20 준비위원회 담당자도 참여하는 G20 쟁점 토론회에서 저들의 논리를 조목조목 비판할 계획이다.

10월 26일에는 저명한 연사들이 참여하는 'G20 정상회의, 누구를 위한 회의인가' 공개 토론회도 개최할 것이다.

10월 17일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대의원대회에서는 G20 항의 운동에 적극 동참자는 특별 결의문도 채택될 것이다.

서울지역 진보진영의 연대체인 '노동자민중의희망' 서울연대도 G20 관련한 토론회와 거리 홍보전을 조직할 것이다. 민주노동당 서울본부 서부지구협의회는 서울 서부지역 단체들과 함께



G20 관련한 공동 대응 기구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곳곳에서 G20 토론회도 개최되고 있다. 노동조합과 대학뿐 아니라 풀뿌리 단체들도 G20 관련 교육 모임을 개최한다. 이런 시도는 더 확산될 것이다.

G20대응민중행동은 10월 21일에 공동행동주간을 선포할 것이고 10월 22~23일 경주 G20재무장관회의를 규탄하는 기자회견도 개최한다. 10월 22일에는 경주에서 G20재무장관회의를 규탄하는 항의 집회가 열린다.

11월 8일부터 10일까지는 국제민중회의를 개최해 국내외 진보진영이 G20 관련한 다양한 포럼을 할 것이다.

11월 7일 G20 규탄이 핵심 기조로 포함된 전국노동자대회에는 수만 명이 참가할 것이다.

정상회담이 열리는 11월 11일 오후 4시에는 강남 지역에서 G20 항의 집회와 행진이 조직된다.

민주노총은 11월 7일 전국노동자대회에 조합원들을 총력 동원할 계획이고, 11일에도 수천 명이 참가할 수 있도록 조직하겠다고 했다.

현장의 활동가들은 현장 조합원들이 항의 집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적극 호소해야 한다.

11월 7일과 11일에 G20 항의 목소리가 힘차게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

강철규



10월 1일 G20 규탄 국제공동행동의 날



북한의 3대 권력 세습, 이것이 사회주의인가

8, 9, 10면

세상을 움직이는

“식탁에는 배추김치 대신 양배추 김치를 올려라”

‘마리 명투와네트’ 이명박

“손학규 대표는 한나라당에서 14년간 같이 호흡했던 분. 생각이 크게 다르지 않고 협조가 잘 될 것이다”

한나라당 원내대표 김무성의 반가움

“영산강 사업은 4대강 사업과는 성격이 약간 다르다. ... 영산강은 수질개선을 확보하는 구체적 목표가 있다”

‘3대강’만 반대하는 민주당 대표 손학규

“4대강 사업은 여성으로 따지면 임신 5개월 이상 지난 것으로, [4대강 반대는] 시어머니가 며느리 임신 못하게 하다가 지금은 낙태하라고 소리치르는 것”

한나라당 장광근의 역겨운 비유

“검찰이 권력형 로비가 터질 때마다 꼬리 자르기를 해서 꼬리국밥집 차릴 것은 아니지 않느냐”

민주당 이춘석

“음향대표는 의사소통이 주기능이다”

경찰청장 조현오

“가족들과도 음향대표로 의사소통 하나?”

“청장님 댁에 음향대표 하나 놔 드려야겠어요”

네티즌들

“사랑의 때”

철도공사 사장 허준영이 1만 명 넘는 노동자를 징계하며

“이 정권에서는 군에 갔다 오지 않은 사람이 더 승승장구하니 ... 국민이 대통령의 ‘공정사회론’을 들으며 느끼는 감정은 시ết말로 ‘너 나 잘하세요다’”

〈동아일보〉논설위원 권순택

서울 거리에서 레프트21을 만나 보십시오

매주 월·금 저녁 7~8시

강남역 6번 출구 1백 미터 파르크라상 앞
신촌역 3번 출구 버거킹 앞
홍대입구역 4번 출구
혜화역 4번 출구
명동 명동 예술극장 앞
건대입구역 5번 출구

서점에서도 레프트21을 살 수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서울대앞), 인사점(건국대 앞), 풀무집(성균관대앞), 이음책방(대 학교), 녹두(동국대후문), 숨어있는 책(신촌), 이상한 나라의 헌책방(역촌), 동방서림(울산 현대차공장 앞)

《레프트21》온라인

《레프트21》트위터를 팔로우해 주세요

《레프트21》페이스북의 팬이 돼주세요

새로운 온라인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지난 호 《레프트21》온라인 판에서 가장 인기 있는 다섯 기사는 『북한의 3대 세습』이것이 과연 사회주의 사회란 말인가, 『진중권이 좌파를 혐오하는 이유』, 『북한 3대 세습에 대한 다함께의 입장』 지도자 대물림하는 북한은 진정한 사회주의 사회가 아니다, 'G20 반대 투쟁의 포문을 열다',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 제안하며 G20 항의 위해 전국노동자대회를 11월 11일로!』 등이었습니다.

www.left21.com

야간집회 금지 시도 중단하라

정부와 한나라당은 ‘고위당정청회의’를 열어서 G20 서울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10월 안에 집시법을 개악하겠다고 방침을 정했다.

그동안 한나라당은 불법폭력집회가 우려되고 국민의 수면권이 침해되며, 경찰력이 무분별하게 동원돼 치안에 공백이 생긴다며 야간집회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경찰청 자료를 보면 야간집회가 허용된 7월~8월까지 ‘불법폭력집회’는 단 한 건도 없었다. 그뿐만 아니라 야간집회는 대개 밤 10시 전에 끝났기 때문에 시민들의 수면권도 침해되지 않았다.

그리고 정부는 이번 G20 정상회의를 위해 전국에 있는 경찰 5만 명을 서울로 불러들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빈자리는 ‘대학생’과 자율방범대가 지키면 된다고 했다. 경찰력을 무분별하게 동원하는 것은 야간집회가 아니라 G20 정상회의인 것이다.

한나라당은 단 이를 동안 진행되는 G20 정상회의만 대비하는 게 아니라, 이번 기회에 야간집회를 금지해서 경제 위기 고통 전가에 맞선 저항의 목소리,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봉쇄하려고 한다.

한나라당 원내대표 김무성도 “회의가 열리는 지역의 경비만 문제가 아니라 한반도 전체 치안을 강화하고 경비 경계를 잘 하기 위해서는 집시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미 지난 6월에 한나라당과 정부는 시민사회단체가 반발하고 여론이 악화해 집시법 개악에 실패한 바 있다. 그것은 “이명박 정부의 반민주적 공격을 막아낸 의미 있는 승리”였다. 이번에도 개악안을 좌절시켜야 한다.

이재환



김민기 작

인권, 민주주의는 어디로? 정부는 ‘전쟁 무기’를 방불케하는 시위진압 장비로 저항을 억누르려 한다.

G20 이용해 민주주의를 공격하는 정부

9월 1일, G20 정상회의 경호안전 특별법이 발효됐다. 그리고 경찰청장 조현오가 10월 11일, ‘G20 종합치안 대책’을 발표했다. 그 내용은 하나같이 이명박 정부가 어떻게 G20을 이용해 민주주의를 공격하고 있는지를 보여 준다.

조현오는 G20 종합치안대책에서 6일부터 13일까지 ‘갑호비상’을 걸고 5만 명이라는 역대 최대 경호 병력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전국에 있는 경찰관들을 동원하겠다는 것이다.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코엑스 주변은 회의 당일, 일반인들의 출입을 통제하기로 했다. 코엑스 6백 미터 반경 안의 주거자와 상근자에게는 주민등록증에 출입스티커를 부착해 신원이 확인되

는 사람들만 출입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또 행사 당일엔 ‘승용차 없는 날’로 지정하겠다고 한다.

다행히 음향대표 사용 계획은 무산됐지만, 경찰이 G20 반대 시위자들에게 사용하겠다는 물대포, 다목적 발사기, 테이저 건, 최루액 등은 끔찍하기만 하다.

G20 반대 목소리 차단

이명박 정부가 이런 G20 ‘올인’을 통해 차단하려는 것은 테러 위협이 아니라 G20에 반대하는 저항의 목소리다. 정부는 코엑스 반경 2킬로미터 안에 3중 방어선을 치고, 그 방어선 안쪽에선 모든 집회를 원천봉쇄하기로 했다.

이처럼 모든 반대 목소리를 폭력적으로 가로막은 후 G20 회의에서 경제 위기 고통전개 계획을 논의하고 결정하려는 게 이명박 정부의 의도다.

G20이 세계경제 위기를 해결할 것이고 한국이 바로 그 중심에 있을 거라는 이명박 정부의 거짓말을 더는 듣고 있을 수 없다.

G20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원천봉쇄하고 그걸 기회로 민주주의를 공격하고 경제 위기 고통을 전가하려는 것이 바로 진실이다.

G20에 반대하는 행동으로 이명박 정부의 거짓말을 우리들이 믿지 않음을 보여 줘야 한다.

나지현

고려대학교 전 출교생들 손해배상 소송 제기

“징계 남발하는 대학들에 경종을 울리려 합니다”

무기정학 무효 판결로 ‘승리의 선례’를 만들었던 고려대 전 출교생들이 또 한번 법정 투쟁에 돌입하려고 합니다. 지난 10월 1일 고려대 전 출교생 5명은 고려대 학교 당국을 상대로 3번의 징계(출교, 퇴학, 무기정학)에 대해 일 인당 총 3천7백만원 씩 도합 약 1억 8천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06년 출교 징계로 인한 2년간 학업 중단, 출교부터 무기정학 징계까지 총

4년 4개월 동안의 정신적 고통과 학교 측의 악의적인 왜곡으로 인한 명예훼손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교 이후 퇴학, 무기정학으로 수위만 낮춰가며 연거푸 징계를 내렸던 고려대 당국의 태도는 너무 악질적이었습니다.

법원마저도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기 위해 무기정학을 내렸다며 고려대 당국의 징계에 제동을 걸 수밖에 없을 정도였

습니다.

우리는 이번 손해배상 소송으로 무엇 보다 징계를 통해 학생들의 저항을 손쉽게 입 막으려는 대학들의 태도에 경종을 울리려 합니다. 지난 몇 년간 대학의 신자유주의화와 구조조정에 맞서 싸웠던 한국외국어대, 동덕여대, 한신대, 동국대, 중앙대 학생들이 징계를 당했습니다. 학생들의 목소리는 외면한 채 탄압으로 억누르기 위해 ‘징계’를 남발했던 것

입니다.

처벌과 탄압이 저항의 싹을 잘라낼 수 없다는 것을 보여 줌으로써, 경제 위기 고통전가에 맞선 노동자·민중의 투쟁에도 자신감을 불어넣고 싶습니다.

출교생들 개인에게는 지난 역울함의 보상이겠지만, 넓게는 투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또 한 번의 승전보가 되길 희망합니다.

주병준 고려대 전 출교생

〈레프트21〉판매자 벌금형 철회를 위한 투쟁 보고

G20 서울 정상회의를 앞두고 곳곳에서 저항이 시작되고 있다. 우리는 저항의 현장에서 지지와 연대를 호소하고 있다.

10월 1일 열린 G20 규탄 집회는 G20에 맞선 저항의 포문을 여는 대회였다. 수백여 명이 G20을 빌미로 한 이명박 정부의 각종 반민주 공격에 항의했다. 대회 주최 측은 우리에게 대한 모금을 공식 호소했고 많은 사람들이 동참했다. 대회 규모에 비해 정말 많은 지지금이 모였다.

민주노총 노동자들에게도 지지를 호소했다. 10월 5일 열린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 참석해 전국에서 모인 대의원들에게

우리 투쟁 소식을 알렸다.

또 10월 8일 열린 건설노조 경기남부 타워크레인지부 총회에도 참석했다. 이곳에서 한 건설노동자는 직접 모금함을 들고 다니며 돈을 모금해 주기도 했다.

그 밖에도 4대강 반대 바자회, 이명박의 교육 정책에 항의하는 대학생 집회, 언론인 행사 등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했다. 그간 열심히 소식을 알린 결과, 우리의 투쟁 소식을 이미 알고 있다는 사람들도 꽤 만날 수 있었다. 곳곳에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거듭 확인할 수 있었다.

자유롭게 의견을 형성하고 다른 사람

들에게 전파하는 자유가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다. 우리는 엄연히 헌법이 보장하는 이 권리를 행사했을 뿐이다.

검찰과 경찰은 자유민주주의의 원리조차 부정한 채 진보 언론을 탄압한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레프트21〉판매자 처벌을 어처구니없어 하며 지지를 보냈다.

10월 21일 두 번째 재판이 열린다. 우리는 법정에서 검찰과 경찰의 의도를 폭로하고, 우리가 무죄임을 주장할 것이다. 많은 분들의 지지를 바란다.

김지태 〈레프트21〉판매자 벌금형 철회와 언론 자유 수호 대책위원회 대표

일지			
5월 7일	강남역에서 〈레프트21〉판매하던 6인을 경찰이 불법 연행함	7월 22일	‘대책위’를 구성함
6월 26일	법원이 6인에게 집시법 위반 혐의로 8백만 원 벌금형을 선고함	7월 25일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등 7개 진보시민단체가 법원의 명령을 비난하는 연대 성명을 발표함
7월 21일	검찰이 선고 한 달 만에 벌금 지로 용지를 보냄	8월 5일	경찰의 위법 체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함
8월 6일	벌금형에 대한 정식 재판을 청구함. 법원이 뒤늦게 보낸 약식명령문이 도착함	8월 16일	벌금형에 대한 1차 재판이 열림. 재판에 앞서 민주노동당, 참여연대, 민연련 등이 공동 주최한 항의 집회를 함

〈레프트21〉판매자 벌금형에 대한 2차 재판

일시 : 10월 21일(목) 오전 11시
장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408호
판사 : 형사22단독 소병진 판사

- 트위터에서 대책위 소식을 널리 퍼뜨려 주세요.
http://twitter.com/support6twit
- 블로그와 이메일로 지지 메시지를 보내 주세요.
http://support6.tistory.com
support6@jinbo.net
- 소송비용과 투쟁기금 마련을 위한 모금에 동참해 주십시오! 변호사 선임비 등 법정투쟁에 돈이 많이 듭니다.
우리은행 1002-337446-442(신명회) 후원 웹 페이지에서 신용카드, 휴대폰 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후원 가능합니다.
http://www.left21.com/B_support.php?from=support6

경찰의 G20 항의 진압 계획 비판

진정 위험한 것은 경찰과 지배자들이다

경찰청장 조현오가 시위대에 음향대포를 사용하려 하다가 거센 반발에 부딪혀 계획을 철회했다.

백남순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기획국장은 지난 10월 8일 열린 토론회에서 음향대포가 고막을 파열시키고 청각 신경에 영구적인 손상을 끼칠 수 있을 뿐 아니라 정신과적 질환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백 국장은 이 자리에서 경찰의 시위 진압 방식이 갈수록 잔인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2008년 촛불 집회 당시 수천 명이 다쳤는데, 부상자의 80퍼센트가 얼굴과 머리에 상처를 입었고 그중 절반 이상은 뒤통수를 다쳤다. 경찰은 물대포를 사용해 사람들의 피부와 고막에 상처를 냈고 심지어 얼굴에 소화기 분말을 직접 뿌리기도 했다.

2009년 쌍용차 파업 당시에는 발암물질로 알려진 최루액을 직접 뿌려 찌는 듯한 더위에 시달리던 노동자들에게 화상을 입혔다. 경찰이 안전성을 검증한다며 스티로폼에 최루액을 뿌리자 스티로폼이 녹아버릴 정도였다.

당시 진압 장비 중에 사람들의 기억에 가장 끔찍하게 남아 있는 것은 테이저건이다.

2005년 국제 엠네스티 조사를 보면 테이저건을 맞고 죽은 사람이 2백45명이나 되는데 쌍용차 파업 당시 경찰은 노동자들의 얼굴을 향해 테이저건을 발사해 노동자가 얼굴에 바늘이 박힌 채 병원에 실려가기도 했다.

백 국장은 경찰이 이번 G20 회의에서 시위대에 게 사용하겠다는 ‘무기’들은 그보다 더 심각한 것들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사용하겠다고 밝힌 ‘다목적 발사기’는 고무탄이나 압축스프린탄을 발사하는 장비다.

이스라엘 경찰이 2000년 10월 초에 벌어진 군중 집회에서 저중량 고무탄을 사용했는데 2백1명이 직접적인 외상을 입었고 그중 39퍼센트는 관통상이었다. 두 명은 고무탄이 눈을 직접 관통해 사망했고 무릎손상으로 입원 중 사망한 사람도 있었다.

다목적 발사기에 사용하는 탄환 중에 가장 안전한 것으로 알려진 고무탄환도 가슴에 맞을 경우 폐와 심장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백 국장은 특히 경찰이 대중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고무탄을 사용할 경우 조준을 하지 못하고 발포해 치명상을 입힐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진정으로 위험한 것은 시위대가 아니라 경찰과 그들이 경호하는 세계 지배자들이다.

장호중



한국의 노동자·학생도 G20 회의에 반대하는 전 세계 노동자들과 연대해야 한다.

CAPITALISM ISN'T WORKING

서울국제민중회의 11/7(일)~10(수) 서강대

G20

G20 대응 대토론회 10/26(일) 저녁 7시

주최: G20대응민중행동 장소: 추후 공지

새로 나온 소책자
G20에 왜 반대해야 하는가 | 2천 원 | 다함께
그동안 G20이 제시한 해법으로 세계 민중은 실익을 얻었는가에 대한 답을 제시하면서, 왜 G20에 반대해야 하는가를 주장한다.
구입문의: 전화 02-2271-2395
인터넷 구입 <http://www.alltogether.or.kr>

G20 서울 정상회의의 암울한 전망

G20 서울 정상회의(이하 G20 회의)에 집권 후반기의 운명을 걸다시피 한 이명박 정부는 G20 회의의 효과를 장밋빛으로 부풀리려고 혈안이 돼 있다.

G20 회의의 직간접적인 경제 파급효과가 21조 원에서 24조 원에 이를 거라는 근거없는 추정을 남발하기도 한다. 여기에는 G20 이전 차량인 현대차를 본 각국 소비자들의 현대차 주문량이 쇠도하면서 수출이 대폭 증가할 거라는 황당한 주장이 포함돼 있다.

2005년 부산 APEC 정상회의 때에도 정부는 1조 원의 경제 효과가 있을 거라고 말했다. 그러나 3천억 원에 이르는 개최 비용과 경호 비용만 낭비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명박 정부는 G20 회의에서 모종의 성과를 남기고 한국 정부의 주도력이 발휘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렇게 될 가망성은 거의 없다.

모종의 사이좋은 합의안들이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지난 10월 초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에서는 ‘환율 전쟁’이 벌어졌다. 영국, 유럽과 IMF는 미국 편에 가세했고, 브라질·러시아·인도

등은 중국 쪽에 힘을 실었다. 갈등이 심각해서 연차총회는 환율에 관한 그 어떤 표현도 성명서에 넣지 못했다.

고래 싸움

국회입법예산처도 11일 공식 보고서를 통해 미중 환율 전쟁 때문에 “서울 G20, 기대에 부합하지 못한 회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원종현 입법조사관은 “특정 국가(중국의) 환율 문제가 서울 정상회의에서 공식적으로 다뤄질 경우 [다툼] 주요 의제가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주요 국가들 간 갈등 때문에 “G20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세계경제 발전을 이끌어 내려는 우리의 기대는 무너질 수 있다”고 솔직하게 시인했다.

경제 위기의 부담을 서로 떠넘기려는 국가들 간 각축이 계속되면 G20이 개혁적인 체하면서 부각했던 쟁점들까지 사실상 폐기될 수 있다. ‘중국이 양보하지 않으면 IMF 지분 조정 논의는 불가능하다’는 미국의 협박이 대표적인 사례다.

한마디로 G20 서울 정상회에서 국제공조가 잘 이뤄질 거라는 이명박 정부의 기대는 몽상으로 끝날 수가 있다.

코리아 이니셔티브를 부각하려고 안달인 한국 정부는 글로벌금융안전망과 빈곤 개발 의제를 부각하려 한다.

그러나 이명박이 주장하는 글로벌금융안전망은 IMF의 대출 한도를 풀고 IMF가 먼저 구제금융을 제안하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것이다. IMF가 구제금융을 제공한 뒤 망가질 대로 망가진 동유럽 경제가 막대한 비극을 더욱 확대하자는 것이다.

빈곤 개발 의제는 개도국 수탈 방식을 더욱 개발하고 다변화하자는 것일 뿐이다. 예컨대, 개도국 빈곤 타파 계획에는 최근 국내에서 혈세 낭비와 통행세 고공 행진으로 맥켈리 같은 투기자본의 배만 불린다는 비난을 받는 민자고속도로가 대표적 사례인 민자유치 방식의 민영화가 포함돼 있다.

이명박 정부가 삼중의 방호벽과 2킬로미터의 ‘명박 산성’, 각종 첨단 무기들로 무장한 경찰 병력의 보호를 받으면서 이루어질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개최일이 가까워질수록 G20 회의의 전망은 더욱 암울해지고 있다.

김어진 G20 대응 민중행동 공동운영위원장
*이 글은 개인 자격으로 쓴 것이다.

작업장에서 건설되고 있는 G20 항의 운동

민주노총은 11월 7일 전국노동자대회에 조합원 10만 명을 조직하고, 정상회의가 시작되는 11월 11일에 있을 ‘국제민중공동행동의 날’에 동참해 “G20 정상회의의 허상을 전 세계에 알려내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 같은 계획을 실현하려면 무엇보다 조합원들에게 왜 G20에 항의해야 하는지 알리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 점에서 최근 몇몇 작업장의 사례는 고무적이다.

건설노조 북부건설기계지부와 경기남부타워크레인지부는 최근 G20 관련 조합원 교육을 했다. 교육을 기획한 박재순 북부건설기계지부 지부장은 “G20 항의 행동에 조합원들을 참가시키려면 우선 간부들부터 G20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 G20 관련 토론회와 교육을 네 차례나 참가했다. 알면 알수록 노동자들이 나서서 G20에 반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경기남부타워크레인지부 교육에 강사로 참가한 김어진 G20대응민중행동 공동운영위원장은 “교육 내내 조합원들이 집중해서 들었다. G20의 문제점을 설명하자 참가자들은 몰랐던 것을 알게 됐다

며 현장에서 이를 적극 알리면서 항의를 건설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건설노조는 전체 지부장들이 참석하는 중앙위원회에서도 G20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유기수 건설산업연맹 정책기획실장은 “정부는 모든 언론을 동원해 G20이 엄청난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선전하고 있다. 그래서 노동자들에게 G20의 실상을 알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노동조합의 시급한 과제다” 하고 강조했다.

공무원노조 법원본부 서울중앙지부와 전교조 동부지회, 세종호텔노조에서도 간부들이 직접 G20의 본질을 폭로하는 소책자를 구입해 조합원들에게 나눠 주면서 항의를 조직하고 있다.

양윤석 서울중앙지부장은 “민주노총이 G20을 규탄한다고 하니 조합원들은 왜 G20에 항의해야 하는지 궁금해 했다. 조합원들이 소책자를 진지하게 읽고 있는 모습을 여러 번 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기아차 ‘현장조직’인 ‘금속노동자의 힘’도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런 노력은 더욱 확대돼야 한다.

조명지

대학에서 G20 반대 운동 건설하기

대학생다함께는 대학들에서 G20 반대 운동을 건설하고 있다.

대학들에서 매주 공개 신문 판매와 함께 G20의 본질을 폭로하는 활동들을 하고 있다.

또, G20의 본질을 폭로하는 대자보를 부착하고, 공개 강연회를 개최하고 있다. 대학생다함께 활동가들은 고려대·건국대·부산대·이화여대·인하대·한국외대에서 G20 반대 운동을 공동으로 건설할 것을 학생회들에 제안했다.

학생회들이 참여하는 G20 항의의 공동기구들이 만들어진다면, 더 많은 대학생들이 G20 반대 운동에 참가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진보적 학생회가 없더라도 G20에 반대하는 공동전선을 건설할 수 있다. 최근 국민대의 대학생다함께 회원은 학내 진보적 학생 단체, 학술 동아리, 개인 들에게 제안해 ‘G20 반대 국민대모임’을 만들었다.

한편, 일부 학생회 활동가들은 “학생

들의 이익을 위한 활동과 정치적인 활동은 분리”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그러나 G20 지배자들의 경제 위기 고통전개 시도는 등록금 인상이나 대학 구조조정처럼 학생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문제들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따라서 G20과 경제 위기 고통전개에 반대하는 노동자들의 투쟁에 학생들이 함께한다면 우리의 저항 능력은 배가될 수 있다.

또, G20을 잘 모르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학생회가 G20에 반대하는 입장을 제시하면 반발을 살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물론 아직 많은 학생들이 G20의 본질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럼수록 진보적 학생회 활동가들은 G20의 문제점을 학생들에게 알리기 위해 더한층 노력해야지, 그런 시도조차 않고서 학생들의 ‘무관심’을 핑계 삼는 것은 활동가의 임무를 방기하는 태도다.

김세란

플라주 37

플라주 : 다양한 재료로 그리는 그림
세상의 다양한 모습을 담아낸다는 의미

지긋지긋한 세습...

일루전

노동자 소득을 강탈하는 물가 폭등

최근 배추·무 등을 중심으로 채소 가격이 몇 급절이나 폭등하면서 노동자들의 삶은 더욱 팍팍해지고 있다.

이런 와중에 이명박은 청와대 식탁에 배추김치 대신 양배추김치를 올리라고 말해 노동자·서민의 화를 돋웠다. 양배춧값도 급값인 상황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떠들어 대는 모습이 프랑스 혁명 때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되지” 하고 말했다고 전해지는 마리 앙투아네트와 비슷하다 해서 ‘명투아네트’라는 별명이 추가됐다.

이명박 정부는 채소 가격 폭등이 폭우 등의 ‘이상기후’ 때문이라는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

그러나 이마트·롯데마트 같은 대형 유통업체들이 이미 7월부터 배춧값이 급등할 것을 예상하고 물량을 확보한 것에서 보듯이, 이명박 정부가 마음만 먹었다면 얼마든지 대책을 세울 수 있었을 것이다.

배추·무·마늘·파 같은 채소들은 이명박이 서민 생활을 위해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고 한 ‘MB물가지수’ 품목들이 아닌가.

양배추김치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을 밀어붙이는 데만 열중하며 오히려 채소 재배지를 축소해 채소값 폭등을 부추겼다.

이명박 정부는 “배추 중간 유통과정에 대량으로 사재기 하는 유통업자가 있다”며 뒤늦게 유통업자 탓을 하기도



익! 소리나게 만드는 배춧값 물가 폭등은 노동계급의 소득을 빼앗는 반면 사장들의 이윤을 늘려준다.

공정당
김지

한다.

그러나 직거래 방식으로 유통구조를 바꾸겠다며 “3년 동안 1천3백 50억 원을 대형 유통업체들에 지원했지만 대형 유통업체의 채소값은 재래시장보다 더 비쌌다.”(한나라당 의원 정해걸)

정부가 자유시장 원리를 따라야 한다며 직거래 가격 책정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아, 발떼기로 채소를 넘기는 농민들은 아무런 이득을 얻지 못했고 결국 대기업 이윤만 불려 준 것이다.

2년새 30~40퍼센트 오른 전셋값도 마찬가지다.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주택 매매가 줄어들면서 전세 수요가 늘 공산이 컸는데도 얼마 전까지 정부는 집값 하락을 막으려고 대출을 확대하는 데만 관심을 기울였다. 건설사와 부동산 투기꾼들의 손해만 걱정하는 것이다.

전세 폭등

정부가 나서 임대 주택을 대폭 늘리고 미분양주택을 전세주택으로 전환해 전세난을 해결하라는 요구에 대해 “주택거래활성화 대책을 내놓은 게 불과 1개월 남짓이다. 또다시 전세 대책을 내놓으면 시장은 혼란에 빠진다” (국토해양부 차관 정창수)며 거부하고 있다.

이처럼 채소값과 전세 폭등에 한몫한 이명박 정부는 전기·도시가

스·버스 요금 등 공공요금을 인상하고,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라는 명목으로 물가인상률의 1.5배까지 등록금을 인상해도 된다는 신호를 대학들에 주는 등 물가인상을 부추겨 노동자·서민의 소득을 갉아먹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게다가 부자들에게 배분 감세 혜택을 노동자들이 주로 내는 간접세로 메워 2007년 47.3퍼센트였던 간접세 비중은 올해에 52.1퍼센트까지 오를 전망이다.

물가 급등으로 불만이 팽배하는 상황에서 이명박은 “우리처럼 물값이 싸고 함부로 다루는 나라가 없다”며 수돗물 가격을 올려야 한다고 말한다.

이처럼 이명박 정부가 ‘친서민’, ‘공정 사회’를 내세우면서도 물가인상과 간접세 비중 확대로 올해 약 5퍼센트 오른 임금 인상분마저 빼앗는 것은 이 정부가 뺏속까지 반서민·불공정 정권이라는 점을 보여 준다.

따라서 노동자의 소득을 갉아먹는 이명박 정부에 맞서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진보진영이 광범한 대중적 저항을 건설해야 한다.

이런 운동 건설은 ‘민란’ 직전인 대중의 공분을 대표해 많은 지지를 얻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경제 위기가 다시 심각해지면 더욱 광포하게 노동자들의 삶을 공격할 이명박 정부의 예봉을 꺾기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강동훈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노동자 보험료 선제 인상은 “사회연대” 아닌 양보일 뿐

보험료 우선 인상을 주장한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이하 시민회의) 참여 인사들이 그동안 언론에 기고한 글을 모아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 시민의 힘으로 출발》을 펴냈다.

이 책은 ‘시민회의’를 이해하는 데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 그러나 저자들은 ‘시민회의’를 진보진영이 비판한 것을 두고는 피상적으로만 대응한다.

대표적으로 ‘노동자들이 먼저 양보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이 책은 답하지 않는다.

낸 것보다 더 받기 때문에 양보가 아니고, 노동자가 내는 만큼 ‘법적으로는’ 기업과 국가도 낼 것이므로 손해가 아니라는 게 답변이라면 답변이다.

그러나 보험료 인상에 대한 노동자들의 거부감은 보험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경험에서 비롯한 것이다. 건강보험 제도가 노동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복지 제도임에도 그동안 노동자들의 부담이 부자들이나 기업주들에 견줘 상대적으로 높고 충분한 보상도 받지 못했다.

무엇보다 건강보험료가 누진율이 아니라 정률로 부과되고 부자들의 납부 탈루가 너무나도 쉽다. 이명박조차 2002년까지 편법으로 보험료를 2만 원씩만 냈다.

이 책의 저자들은 ‘민간보험’보다는 낫다는 논리로 이런 문제들에 눈감아 버린다. 건강보험은 소득만큼 내고 필요한 만큼 받는다고 과장한다. 이런 제도들로 “사회연대”를 이룰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노동자들이 만들어 낸 부를 기업주들이 착취하는 자본주의 체제에서 ‘소득만큼 내고 필요한 만큼’ 받는 복지 제도란 있을 수 없다.



7월 17일 ‘모든 병원비를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 출범식 민주당조차 국가·기업의 부담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해 ‘시민회의’의 처지는 궁색해졌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김지

‘시민회의’가 부러워하는 영국, 프랑스, 스웨덴의 보장성 높은 의료제도는 노동계급이 투쟁으로 쟁취한 것이지 먼저 보험료를 인상하겠다는 식의 ‘사회연대’ 선언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시민회의’는 노동자들의 보험료를 올리는 것을 “혁신적”인 “진보의 패러다임 변화”로 받아들이며 달라고 주문한다. 오건호 위원의 말을 빌리면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 대중교통체계 개편으로 정치적 권위를 획득했듯이, 진보운동도 모델 사례를 만들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이 말하는 혁신과 패러다임 변화는 자본가들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 노동자들에게 양보를 요구하는 것일 뿐이다.

박형근 교수는 “‘건강보험 하나로’가 현실화되는 것은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의 표현을 빌리자면 ‘아버지의 꿈’을 실현하는 것이기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파에게까지 추파를 던지는 듯한 인상을 줘 영 찜찜하다.

이런 후퇴와 양보를 전제로 한 ‘모델 사례’는 복지 확대의 원동력인 노동자들의 투쟁과 계급의식에 악영향을 줄 뿐이다.

심지어 최근 자유주의 자본가 정당인 민주당조차 먼저 국가·기업의 부담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자고 주장하자 ‘시민회의’의 처지는 궁색해졌다. ‘시민회의’가 민주당과 다른 점이 좀더 노골적으로 노동자들의 양보를 주장한다는 점이 났기 때문이다.

‘시민회의’ 주도자들은 진보진영이 제시하는 다른 대안들을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보험료 우선 인상 철회는 논의할 수 없다고 한다. ‘시민회의’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라는 대의가 아니라 보험료 우선 인상 즉, 노동자들의 양보를 요구하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이다.

보험료 우선 인상을 정당화하는 변명으로 가득 찬 이 책은 ‘시민회의’의 궁색한 처지를 보여 준다.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회원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 촛불 문화제 연행자들 재판

재파병 찬성 집회는 무혐의, 재파병 반대는 처벌?

지난해 11월 18일 오바마 방한에 맞춰 아프가니스탄 재파병에 반대하는 촛불문화제에 참가했다 연행돼 벌금형을 받은 사람들 중 세 명의 정식 재판이 지난 9월 30일 열렸다.

당시 오바마가 방한했을 때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는 기자회견과 촛불문화제를 열어 아프가니스탄 재파병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낸 바 있다. 당시 경찰은 기자회견과 촛불문화제가 모두 “불법 집회”라며 참가자들 중 20명을 연행했다.

법원은 연행된 사람들에게 적게는 50만 원에서 많게는 3백만 원의 벌금형을 약식명령했다. 정식 재판을 청구한 사람들 중 두 명은 올 6월 야간 집회시위 금지법이 위헌 판결을 받아 효력을 잃자, 사실상 재판이 중단됐다. 법원은 법이 개정된 후 재판을 속개하자고 했다.

야간 집회시위 금지법 위반죄로는 처벌할 수 없게 되자 검찰은 조성민, 천경록, 전종환 씨를 “해산 명령 불응죄”로 바꿔 기소했다. 공소를 취하해야 마땅한데도 말이다. 함께 연행된 박용석 씨의 경우에는 검사가 집시법 위반죄에 대해서는 공소를 취하했다.

검찰은 야간 집회시위 금지법이 무력해진 것을 어떻게 해서든 만회하고 운동을 공격하려 한다. 또한, 같은 날인 11월 18일 우익이 연 집회에 검찰이 보인 태도와도 완전히 대

조된다. 그날 우익은 오바마 방한 환영·아프가니스탄 재파병 찬성 집회를 열어 재파병에 반대하는 반전평화세력을 친북이라 비난하고 인공기를 불태우며 광분했었다. 그런데 검찰은 이들의 집회도 미신고 집회이긴 했으나 오바마를 환영하는 ‘축제’ 성격이 짙었다며 무혐의 처리했다.

9월 30일 열린 재판에서 천경록 씨는 “해산명령의 근거가 미신고 집회라는 건데 미신고 집회가 된 것이 야간집회를 금지하기 때문이 아니냐? 따라서 해산 명령의 근거가 잘못돼 있으면 명령 자체도 잘못된 것 아니냐”고 했다.

그런데 이 재판을 맡은 소병진 판사는 “해산 명령이 잘못됐다고 해서 해산 명령에 불응한 것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는 해괴한 논리를 펴며 피고인들을 공격했다. 소병진 판사는 《레프트 21》 판매로 벌금형을 받은 여섯 동지들의 재판에서도 피고인 김지태 씨의 모두진술을 거듭 제지하다 결국 퇴정 명령까지 내린 바 있다.

만약 이 재판에서 피고인들이 해산 명령 불응죄로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이것은 야간 집회시위 금지법 위헌 판결을 사실상 뒤집고 집회시위의 자유를 더한층 옥죄는 판결이 될 것이다. 다음 재판은 10월 21일 (목) 오후 4시 30분 서울중앙지법 서관 408호에서 있을 예정이다.

조승희

10·17 빈곤 철폐의 날

빈곤 없는 세상이 가능하다

해마다 10월 17일은 유엔(UN)이 정한 세계 빈곤퇴치의 날이다. 한국에서도 민중·진보단체 등이 주축이 돼 “빈곤 없는 세상은 가능하다”는 구호로 빈곤철폐의 날 투쟁대회를 연다. 올해는 경제 위기 책임전가를 통해 빈곤을 심화시킬 G20 정상회의의 규탄 목소리도 크게 낼 것이다.

BBC가 전 세계에서 2만 5천 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한 결과 71퍼센트가 인류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로 빈곤을 꼽았다.

올해 세계식량농업기구(FAO) 보고서를 보면 전 세계에서 9억 7천만 명 이상이 굶주리고 있다. 세계 인구 여섯 가운데 하나 꼴로 굶주리는 것이다. 굶주림이나 관련된 질병으로 해마다 1천만 명이 죽고 있다. 열 살 미만 어린이가 5초에 한 명씩 죽고 있다.

이런 빈곤 문제는 머나먼 아프리카 문제만은 결코 아니다. ‘글로벌 코리아’에서도 정부 공식 통계로만 절대빈곤율이 12퍼센트로 6백만 명 가까운 사람이 고통받고 있다.

한국은 상대적 빈곤도 심각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것을 보면 상대적 빈곤율이 2000년 10.5퍼센트에서 2008년 14.4퍼센트로 급격히 늘었다. OECD 평균보다 4배나 빠르다.

그러나 “친서민”을 외치는 이명박 정부는 빈곤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내년 최저생계비는 폭등하는 물가 속에서 고작 5.6퍼센트 올랐다. 최저생계비 산정 내용도 비현실적이다. 정부는 빈곤층에게 두루마리 화장지 한 개로 한 달을 버티고, 휴대전화 통화는 하루에 45초만 쓰라고 한다.

빈곤 문제를 해결하려는 국제적 노력은 지지부진하기만 하다. 2000년 1백89 나라 정상들은 유엔에 모여 2015년까지 세계 기아 비율을 절반으로 줄이고 아동 사망률 감소 등 여덟 개 목표를 담은 새 천년개발계획을 채택했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지금 어느 것 하나 계획대로 되고 있는 것이 없어, 이대



서울역의 노숙자 이명박 정부는 땅 파는데 수십조 원을 쓰면서 이들은 나몰라라 한다.

로 가다 단 한 개의 목표도 달성하기 힘든 상황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최첨단 기술이 발달한 21세기에도 빈곤이 만연할까?

흔히 식량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한다. 그러나 세계식량농업기구는 이미 1980년대 생산력으로도 1백20억 명을 거뜬히 먹여 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왜

미국이 이라크·아프가니스탄 전쟁에 1천2백조 원 이상 쓰고 이명박이 땅 파는데 수십조 원을 쓰는 상황에서 빈곤을 퇴치할 재원이 부족하다고 말할 수도 없다.

결국 많은 사람들이 빈곤으로 고통받는 것은 식량과 부는 이미 충분하지만 이를 제대로 분배하지 않아서다. 자본주의는 이윤을 위해 끝없이 경쟁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식량마저 이윤 논리에 종속시킨다. 그래서 자동차, 세탁기처럼 식량도 사고파는 상품이고 돈이 없으면 시장 논리에 따라 굶는 수밖에 없다.

자본주의 이전에는 부가 부족해서 사람들이 굶었다면, 자본주의에서는 너무 많이 생산해도 불공정한 분배 때문에 굶는 것이다.

불공정한 분배는 상상할 수 없는 불평등을 낳는다. 이견희 재산 8조 7천억 원은 평범한 노동자가 30만 년 넘게 한 톨도 쓰지 않고 일해야 모을 수 있는 돈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조리에 환멸을 느끼며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한다.

사람들은 흔히 공정무역이나 자선 같은 개인적 실천을 통해 빈곤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빈곤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는 탐욕스런 기업주들과 각 나라 권력자들에 대면 이런 실천은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다.

그러나 이런 개인적 실천을 통해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다. 왜냐하면 빈곤은 일부 예외적 현상이나 일탈이 아니라 자본주의 고유의 결함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빈곤과 불평등을 만들어내는

사회 구조, 즉 소수가 부와 권력을 독점하는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한다. 이런 뿌리를 건드리지 않은 채 이뤄지는 개인적 실천과 자선 등은 빈곤을 완화하기도 어렵고 오히려 문제의 본질을 흐릴 수 있다.

빈곤의 뿌리에 도전하는 운동에는 그토록 적대적인 보수 언론과 지배자들이 자선·기부 등을 찬양하는 것은 이때문이다.

결국 개인적 실천보다 훨씬 더 큰 규모로 국제적인 부를 재분배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기업주·부자들의 재산을 환수하고 세금을 부과해서 빈곤을 해결하고 복지를 확대하기 위한 일에 써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개인적 실천이 아니라 집단적 투쟁이 필요하고 그것은 빈곤의 뿌리에 도전하는 운동으로 발전할 수 있다.

이런 운동은 G20 정상회의처럼 경제 위기 책임을 노동자·민중에게 떠넘기려는 시도에 반대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

박건희

우익의 동성애 혐오 선동에 맞서야 하는 이유

오랜만에 ‘동성애’가 뉴스에 오르내리고 있지만 하나같이 다 경악스러운 내용이다.

드라마 <인생은 아름다워>를 규탄(?)하는 <조선일보> 광고는 말할 것도 없고, 교도소에서는 동성애가 나온다는 이유로 <인생은 아름다워> 방영을 중단했다. 대형교회에서는 동성애 퇴치를 위한 기도회가 열리고 있다.

‘인생은 아름다워 보고 계되던 내 아들 AIDS로 죽으면 SBS 책임지라’며 끔찍한 편견을 부추기는 물상식한 광고를 실은 자들은 ‘바른 성문화를 위한 국민연합’(이하 바성연)이었다. 이런 우스꽝스러운 주장을 누가 받아들일까 싶겠지만 동성애가 비정상이고, 에이즈가 동성애 때문에 전염된다고 여기는 것이 이 시대의 지배적 사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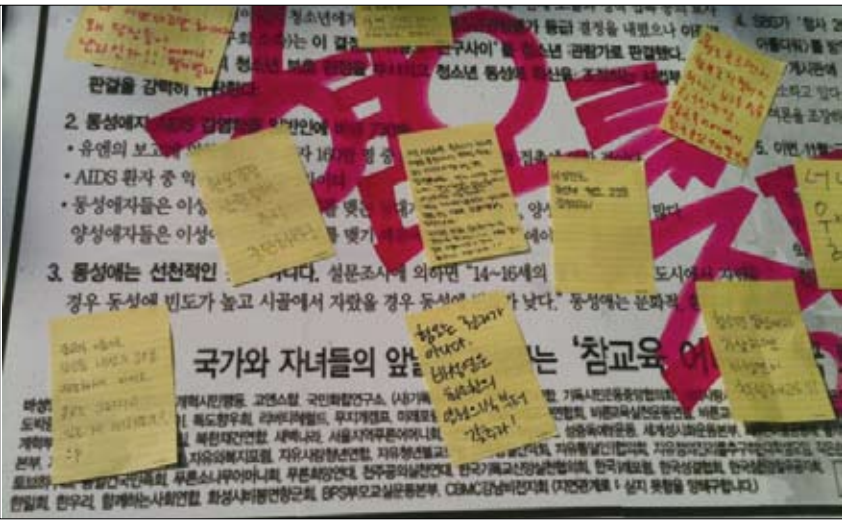
한국 사회에서 혐오범죄가 보도된 바는 매우 적어서 ‘혐오 조장’의 공포가 아직 직접적으로 다가오진 않는 것 같다. 그러나 최근 미국에서는 자신이 동성과 사랑을 나누는 모습을 룸메이트가 몰래 찍어 전 세계에 생중계한 것 때문에 18세의 대학생이 투신자살한 사건이 일어났다.

며칠 뒤 뉴욕에서는 갱단이 동성애자 세 명을 가두고 고문했다는 기사가 실렸다.

한국에서도 청소년 동성애자 커뮤니티의 상담게시판을 보면 많은 자살 상담이 올라온다. 국내의 한 연구 결과를 보면, 청소년 동성애자 70퍼센트 이상이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고, 이 중 실제 자살을 시도한 경우도 절반 가까이나 된다. 불특정 다수의 혐오의 대상, 폭력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동성애자들에게 골방에 처박혀 세상으로 나오지 말라는 것과 같다.

‘바성연’의 말도 안 되는 논리는 동성애자인권연대 등 많은 논자들이 조목조목 비판했으므로 여기서 재론하지는 않겠다. 다만 이들은 왜 동성애 혐오를 선동하는가? 그것이 문제다.

우선 이 자들은 성적지향을 차별금지 사유로 두는 차별금지법이 ‘동성애허용법’이라며 게거품을 문다. 이 자들은 다시 상정될지도 모를 차별금지법안을 휴지조각으로 만드는 것을 우선적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차별에 반대하는 사람이라면 이 불순한 시도에 맞서 싸우는 것이 마땅하다. 무엇보다 우리는 이 자들이 조장하고자 하는 성적 보수주의와 도덕주의가 여러 민주적 권리를 갉아먹으려는



우익의 역겨운 동성애 혐오 광고에 붙여진 항의 메시지들

시도와 연결돼 있다는 것을 봐야 한다.

1980년대 초 미국 레이건 집권 당시 에이즈를 ‘게이 돌림병’, ‘변태적 성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천벌’ 등으로 규정하며 혐오를 조장했던 역사가 다시 재현되려는 것이다.

에이즈 공포를 이용해 동성애 혐오를 부추기는 것은 낙태권 공격, 노동자 권리 축소, 인종차별 강화 등 사회 전반의 보수화라는 맥락 속에서 일어났다.

동성애자들은 다시 골방으로 들어갔고, 직장에서도 동성애자로 밝혀진 노동자들은 바로 해고당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던 시기였다. 그동안 쟁취했던 민주적 권리들이 후퇴한 것이다.

2010년을 살아가는 우리가 다시금 이런 악몽을 떠올리게 되는 것이 끔찍할 따

름이다. 우리는 결코 그때로 되돌아가서는 안 된다.

동성애 혐오를 조장하는 자들에 맞서 동성애자 권리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커져야 한다. 자신조차 드러낼 수 없는 극심한 억압 속에 살아가는 동성애자들에 대한 폭넓은 연대가 형성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지난주 열린 규탄 기자회견에는 낙태권을 위해 투쟁하는 여성 활동가들과 이주노동자들, 에이즈 환자들과 연대하는 의료인들이 적극적으로 참가했다.

우익의 선동에 맞서야 하는 지금, 차이를 뛰어넘어 우리가 함께 싸워야 할 이유가 충분함을 이해해야 한다. 동성애 혐오 반대 운동을 건설해야 할 때다.

이경 동성애자인권연대 활동가

사범대 구조조정 말고 교사 채용 확대하라

지난 8월 정부가 사범대 구조조정 안을 발표했다. 정부 발표를 보면 사범대 열 곳이 C등급을 받아, 내년에도 같은 등급이면 정원을 20퍼센트 감축해야 한다.

비사범대생들이 교직을 이수할 수 있는 기회는 더 줄어들게 됐다. 교직이수 과정은 49개 모든 대학이 C나 D 등급을 받아 정원을 20퍼센트 또는 50퍼센트 줄여야 한다. 교육대학원도 두 대학을 제외한 모든 대학이 C나 D 등급을 받아 교직 양성 기능을 50퍼센트 줄이거나 아예 폐지해야 한다.

지난 토요일 교사대 예비교사 한마당에 참가한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 보니 많은 학생들이 정부의 일방적 구조조정에 반감이 있긴 하지만, 구조조정은 필요하다는 정서도 꽤 널리 퍼져 있었다.

올해 서울지역 임용 경쟁률이 43.8대 1에 이르는 상황에서 교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줄여 경쟁률을 낮추자는 정서가 광범한 것이다.

하지만 교사 임용 경쟁이 심각한 이유는 모두 정부와 사립학교, 기업들이 교육과 청년들의 고용을 위해 돈을 쓰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교사 채용을 줄이고 있다. 2000년대 중반 89퍼센트까지 되던 교원 확보율이 지금은 80퍼센트도 되지 않는다. 정부가 정한 기준으로 봐도 교사 3만 7천여 명을 더 충원해야 한다.

또 심각한 청년실업 때문에 학생들이 교사 임용시험에 몰리고 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교사 수를 늘리긴 커녕 줄이고 있다.

정부는 사범대를 구조조정해 교사 수를 줄여 교육에 드는 돈을 줄이려 한다. 또, 사범대 구조조정은 정부가 만든 극심한 임용 경쟁의 책임을 감추는 효과도 낼 것이다.

이런 정부에 맞서 교사 임용을 늘리려면 학생과 교사들이 단결해 투쟁을 확대해야 한다.

그런데 학생들이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받아들인다면 정부의 논리에 일관되게 대응하기 힘들고, ‘부실’하다고 찍힌 사범대와 교직을 이수하려는 비사범대 학생들을 제대로 방어할 수 없다.

구조조정 대상인 대학 학생들은 정부와 대학이 만든 ‘부실’ 낙인에 고통받고 있다. 또 교사를 지망하는 비사범대생들은 교사가 될 기회를 크게 제한받게 되므로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정서가 클 것이다.

이런 학생들의 분노를 모아 정부가 교사 수를 늘리도록 단결해 투쟁을 확대해야 한다. 그러려면 정부가 강요하는 사범대 구조조정을 분명하게 반대하며 동력을 확대해야 한다.

사범대 구조조정은 사범대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정부가 9월에 대학 30곳을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으로 발표한 것에서 보듯 정부는 전체 대학에 구조조정 압력을 가하고 있다. 일 자리를 늘릴 생각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와 기업들은 평범한 사람들이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축소하려 한다. 여기에는 배움의 기회가 가로막힌 사람들에게 불안정한 저질 일자리를 받아들이게 하려는 악랄한 의도가 담겨 있다.

대학 구조조정을 통해 학생들에게 고통을 떠넘기려는 시도에 단호히 맞서야 한다.

정선영



사진 출처 Jon Sankle

20만 명이 참가한 이날 집회는 미국 운동의 잠재력을 보여 줬다.

10월 2일 미국 워싱턴 집회

노동조합들이 ‘티 파티’에 대항하다

워싱턴에서 에릭 프레츠 남아공 사회주의자

10월 2일 토요일 미국 워싱턴 DC에 10만을 훌쩍 넘는 사람들이 “일자리, 정의, 교육” 보장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미국 산별노조총연맹 AFL-CIO와 민권운동 단체인 전미유색인지위향상협회 NAACP가 주최한 이 집회는 “우리는 모두 동포, 다 함께 일하자”를 기치로 내걸었다. 기업 후원을 받고 인종 차별적이며 이주자들을 비난하는 티 파티에 대항하기 위해 열린 집회였다.

집회에는 매우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고 대부분 노동자들이었다. 다양한 인종을 대표하는 노조원들과 민족 공동체, 환경 단체, 평화 단체 수백 곳이 집회에 참가했다.

크라이슬러의 디트로이트 공장에서 용접 일을 하는 트리스는 대형 노조인 전미자동차노조 소속이다. 트리스는 “나는 오하이오 공장에서 일했는데 그곳이 문을 닫으면서 일자리를 구할 수 없었다. 디트로이트에서 일자리를 구했는데 이제 이곳에서도 일자리를 지키려고 싸우는 중이다” 하고 말했다.

집회 주최 측 추산으로 17만 5천 명에서 20만 명이 참가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우익 라디오 쇼 진행자인 글렌 벡이 8월에 개최한 ‘티 파티’ 집회에 참가한 8만 9천 명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이번 집회에 참가한 것에 고무됐다.

민주당에 투표하라는 속내를 내비치다

그와 동시에, 이 집회의 풍부한 잠재력은 11월 2일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의 승리를 노골적으로 바라는 주최 측 때문에 억제됐다.

AFL-CIO 위원장 리처드 트럼카는 “좋은 직장, 정의, 교육을 요구하는 여러분의 목소리를 오늘날이 아니라 선거일에도 내겠다고 약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촉구했다.

이런 주장은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엄청난 돈을 쏟아부어 은행과 자동차 회사를 구제했지만 집과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을 돕는 데는

인색한 사실을 무시한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의 걱정거리는 2년 전 오바마에게 투표한 많은 사람들이 우파 지지로 돌아서지는 않았지만 [오바마에게] 실망하고 있고, 그 실망이 이 집회의 지도자들이 연설에서 밝힌 “열정의 공백”으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현상 유지를 옹호하는 것으로는 열정이 생기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다. 집회 지도자들은 열정을 되살리려고 경제 상황에 분노하는 대중 정서를 이용해야 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그들은 너무 기대치를 높여 행동이 통제를 벗어나지 않도록 조심했다.

집회 전 이를 동안 국제항만노조의 연대 활동으로 뉴욕과 뉴저지 항이 봉쇄됐다. 그러나 국제항만노조는 집회에서 그 투쟁을 보고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 마찬가지로 같은 날 프랑스에서 벌어진 대중 시위를 언급한 연사도 없었다.

반전 대열

평화 운동은 이번 집회를 준비하는 데 많은 공을 들였다. 평화 운동은 반전 연사를 초청하고, 집회에서 제출할 광범한 요구 사항들 중에 반전 요구도 포함해 줄 것을 요청했다. 몇 달에 걸쳐 협의했음에도 집회 주최 측은 놀랍게도 전쟁에 대한 모든 비판을 틀어막았다.

오바마는 여전히 이라크 파병과 아프가니스탄 증파를 고수하고 있지만, 노조 지도부는 그런 문제로 오바마를 비판하기를 꺼린다. 그러나 대다수 미국인들은 이 전쟁들을 반대한다.

주최 측의 협조를 받지 못했지만, 반전 활동가 수천 명은 집회 전에 미리 모여 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행진해서 본 집회에 합류했다. 반전 대열은 환대를 받았다. 반전 대열은 “전쟁이 아니라 일자리에 투자하라” 같은 메시지가 적힌 팻말 수만 장을 나눠 줬 집회에 반전 요구를 아래로부터 포함시키는 데 성

공했다.

그날 연단에서 가장 예리한 정치적 주장을 펼 사람들은 노조 지도자나 정치인이 아니라 몇몇 연예인들이었다.

연예인들이 정치적 발언을 하다

드라마 <와이어>와 <트레메>에 출연한 웬델 피어스는 링컨 기념관 계단에서 “사람들은 킹 목사를 ‘나는 꿈꿨다’라는 연설로 기억하지만, 마틴 루터 킹은 모든 미국인이 경제적 정의를 누려야 한다는 또 다른 꿈에 주의를 돌렸습니다” 하고 연설했다. 피어스는 킹 목사의 1967년 연설을 인용했다. “언젠가는 다음과 같이 물어야 합니다. 왜 미국에 4천만 명이 넘는 빈곤층이 존재하는가? 그런 의문을 품기 시작한다는 것은, 경제 시스템에 의문을 가진다는 것이고, 사회적인 부의 분배 문제에 의문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 그런 의문들을 풀어가면서 당신은 인종차별 문제, 착취 문제, 전쟁 문제가 모두 연결돼 있음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열정을 돋우다

에바와 루비는 집회에 참가하려고 플로리다에서 열 여덟 시간을 차로 달려왔다. 에바는 “우리는 오바마를 좋아하지만 그는 꾸물거리고 있습니다. 오바마는 당장 군대를 철수해야 하고 기업에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것을 중단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런 일들을 경제 발전을 위해 한다고 얘기하지만 나는 그 경제 발전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기업을 위해서입니까, 보통 사람들을 위해서입니까?” 하고 말했다. 루비는 집회에서 희망을 품게 됐다며, “오늘 같은 날들이 있기에 우리는 변화를 위해 계속 싸워 나갈 열정을 품게 됩니다” 하고 말했다.

출처 영국의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번역 정중수

기사 전문은 www.left21.com을 보시오.

파키스탄 전쟁이 확산되면서 긴장도 고조되다

곤경에 빠진 나토의 전쟁은 계속 파키스탄으로 확산하고 있고, 이 때문에 미국과 파키스탄 정부 사이에 갈등이 심해지고 있다.

지난주 일요일[10월 10일] 미국 무인 폭격기의 로켓이 북아프리카 리스탄 난민 캠프를 공격했다.

이것은 파키스탄 정부가 항구 도시 카라치에서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로 통하는 물자 수송로를 나토 트럭들에 재개방한 지 겨우 몇 시간 뒤에 일어났다.

파키스탄 정부는 미군 헬리콥터가 자국 영토를 침범해 군사 활동을 벌인 것에 항의해 국경을 닫은 바 있다.

당시 미국 병사들은 파키스탄 병사 여러 명을 ‘자하드 투사’로 오인해 살해했다.

국경이 봉쇄된 덕분에 부족 전사들이 미군 수송 트럭을 공격할 수 있었고, 미군은 이 점을 당혹스러워 했다. 지금까지 나토 석유 탱크 약 5백 대가 사라졌다.

최근 나토 무인 폭격기 공격이 강화되면서 사람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CIA가 더 많은 무인 폭격기를 아프가니스탄에서 파키스탄으로 재배치할 예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불만은 더 커

질 것이다.

파키스탄 정부 관리들은 2009년에만 무인 폭격기의 공격으로 민간인 7백 명이 사망했다고 추정한다. 2010년 사망자 수는 더 많을 것이다.

파키스탄 일간지 <둔>은 이렇게 보도했다. “미국 무인 폭격기는 알카에다 한 명이나 탈레반 테러리스트 한 명을 죽이는 과정에서 무고한 파키스탄인 1백40명을 죽인다. 파키스탄 정부 관리들은 무인 폭격기의 미사일 공격으로 죽은 사람 중 90퍼센트 이상이 민간인이었다고 주장한다.”

이번 주 발표된 백악관 보고서는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진전이 느리다”고 토로했다. 또, 파키스탄 군대가 자국 영토에서 게릴라들을 효과적으로 공격할 능력과 의지가 부족한 것이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파키스탄의 반미 여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무인 폭격기 공격이 늘어날수록 ‘테러와의 전쟁’이 심각하게 분열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출처 영국의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번역 김용욱

불평등과 빈곤이 거론되지도 않은 브라질 대선

로저 콕스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 당원

브라질 대선이 2차 결선투표로 접어들었다.

대통령 룰라의 후계자인 집권 노동자당의 지우마 호우세피가 1차 투표에서 과반수에 3퍼센트 못 미치는 득표를 했기 때문이다.

호우세피의 주된 경쟁자인 주제 세하 — 보수정당인 브라질사회민주당(PSDB)의 후보 — 는 33퍼센트에 가까운 득표를 했다. 예상치 못한 것은 전 환경부장관 출신의 녹색당 후보 마리아 실바가 19퍼센트를 득표한 것이었다.

대통령직을 연임한 룰라는 보우사 파밀리아(빈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소득제) 같은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도입함으로써 인기를 누려 왔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빈곤에서 벗어나는데 도움이 됐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사람들

이 빈곤과 불평등에 시달리고 있다. 브라질은 세계에서 불평등이 가장 심한 나라 중 10위다. 이제껏 비껴 있던 불황이 브라질을 마침내 강타한다면 빈곤과 불평등은 심화될 것이다.

사회주의와자유당(PSoL)의 활동가 엔리케는 <소셜리스트 워커>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

“선거를 둘러싼 논쟁에서는 주목할 것도 없고 별다른 논란도 없다.

“이 때문에 녹색당이 이득을 얻을 여지가 생겼다. 그러나 이들은 좌파 정당이 아니다.

“부자들에게서 빈민에게 부를 재분배하는 문제도 일절 부각되지 않았다.

“부자들은 브라질 노동자당 아래서도 잘 지내 왔다. 그러나 대다수 국민은 여전히 가난하다. 이 때문에 불만이 늘어 가는 것이다.”

출처 영국의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번역 천형석

독일 정부를 곤경에 빠뜨린 슈투트가르트 저항 운동

스테판 보르노스트

독일의 월간지 <마르크스21> 편집자

슈투트가르트 중앙역사를 바꾸려는 계획이 대규모 저항 운동을 낳았고, 이 운동은 독일 정부의 정치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

경찰이 이 운동을 공격하자 10월 1일 10만 명이 경찰 공격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다.

‘슈투트가르트 21’은 기존 역사를 없애고 그 토지를 팔아 치우고 지하에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대규모 계획이다.

이 계획에 무려 1백억 유로[약 15조 7천억 원]가 들 것이지만 사람들에게 주는 이득은 없다. 왜 대중교통, 학교, 보육 시설 같은 절실히 필요한 시설을 건설하는 계획은 내팽개치고 새 역사를 건설해야 하는지도 의문이다.

10월 1일 시위 전날에 경찰이 시위 참

가자들을 무차별 구타해 1백40여 명이 다치고 한 연구 생활자는 시력을 잃을 위험에 처했다.

수주 동안 수만 명이 슈투트가르트 중앙역사 앞에서 시위를 벌이며 철거를 막았다.

이런 시위의 결과로 공사가 잠정 중단되고 협상이 벌어질 것 같다.

이 투쟁은 전국 정치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독일 총리 메르켈은 ‘슈투트가르트 21’을 밀어붙이지 못하면, 건축정책에 항의하는 대중 행동의 압력에 밀리지 말라고 자신이 그리스 정부에게 요구할 근거가 사라진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도시 30여 곳에서 연대 시위가 벌어졌다.

이런 저항의 결과 저항 운동을 강력하게 지지한 녹색당의 지지율도 크게 상승했다. 최초로 여론조사에서 녹색당이 사

회민주당의 지지율을 앞섰다.

많은 노조원과 실업자 운동가들이 ‘슈투트가르트 21’ 항의 행동을 보면서 힘을 받았다.

이것은 연말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정부의 건축정책에 항의하는 행동을 조직하는 것을 도울 것이다.

출처 영국의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번역 김용욱

Letter@left21.com

독자토론광장

10월 25일(월)까지 여러분의 생생한 경험, 지인과 나는 대화, 운동의 발전을 위한 자신의 생각 등 어떤 것이든 보내 주세요. 책임 있는 토론을 위해 국가보안법 등 국가 탄압이나 사용자 탄압, 소수자 차별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되도록 실명으로 기고해 주길 바랍니다. 지면이 넘쳐 실리지 못한 독자편지는 본지 웹사이트에 실립니다.



'장애인 활동보조 살리기' 노숙 농성장에 걸린 팻말

조영오 기자

알량한 장애인 복지마저 빼앗으려는 이명박 정부

나는 장애인 활동보조인으로 근무하고 있다. 혼자서 거동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도와주는 일이다.

이 제도는 오랜 투쟁 끝에 2007년부터 도입됐지만, 아직도 적용받지 못하는 장애인들이 부지기수다. 제도의 취지는 장애인들이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만, 현 상황은 사회생활은커녕 장애인과 활동보조인이 함께 생존선에서 허덕이는 지경이다.

혼자 사는데다 한 손밖에 움직이지 못하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한 달에 최대 1백80시간이다. 나머지 5백40시간을 홀로 버텨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이 쥐꼬리만한 복지도 공격하고 있다.

지난해 예산이 부족하다며 활동보조 신규 신청을 금지했다가 반발에 부딪혀 물러난 뒤로, 올해에는 아예 장애인들의 등급을 재심사해 탈락시키고 있다. 심지어 심사 비용조차 장애인들에게 전가하고 있다. 장애인들에 대한 각종 복지정책들을 보편화해서

장애인들에게 비용을 더 물리려는 입법도 추진 중이다.

이에 맞서서 장애인들은 장애인등급제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투쟁하려고 한다.

이명박 정부의 복지 삭감은 비단 장애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 친척, 친구인 평범한 노동자들에 대한 공격이기도 하다. 이들의 투쟁에 지지와 연대를 보내자.

김태운

고려대도 중앙대처럼 구조조정하려 하는가?

지난주 고려대학교는 한 경영컨설팅트 업체에 '경영 진단'을 의뢰하는 계약을 맺었다. 고려대학교는 이 계약에 자그마치 8억 6천6백만 원이나 지불하기로 했다. 2천만 원 넘는 계약은 공개입찰을 해야 하는데도, 학교는 바로 수의 계약을 맺었다. 바로 그 업체가 두산재벌이 중앙대 구조조정을 위해 컨설팅을 했던 업체다.

이 업체가 중앙대 구조조정을 컨설팅한 내용을 보면, 이번 '경영 진단'이 무엇을 노리는지 짐작할 수 있다.

컨설팅 후 중앙대는 '경쟁력 없는' 학과·학부를 통폐합하고, '성과'에 따라 정원을 줄이려 했다. "경영대 특성

화 대학", "문과대 폐지"와 같은 안까지 나왔다. 기업 입맛에 맞는 학문과 연구에 투자하고, 순수학문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것은 뒷전으로 밀리게 됐다. 학생 간 경쟁 강화, 교수 간 실적 경쟁 강화 때문에 많은 학내 구성원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

고려대학교 교직원노조는 이번 경영진단이 해고와 비정규직을 늘리고 노동조건을 악화시킬 것이라 보고 있다. 강사 수백 명을 해고해 해고율이 전국 4위인데다 교직원들을 비정규직화하고 인원을 감축해, 이미 인원이 부족한 상황인지라 구조조정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이것은 학생들에게도 피해를 준다.

이미 학생들은 전임교원이 부족하고 대형강의는 지나치게 많아 질 낮은 수업에 고통받고 있다.

고려대학교 재단은 이 '경영 진단'을 이용해 올해 말 선출되는 신입 총장에게 대학 구조조정 압력을 넣을 것이다.

이미 고려대학교에는 등록금 인하, 생계형장학금 확대, 고용 확충, 비정규직 정규직화, 전임교원 확충, 수업의 질과 시설 개선 등 학생과 노동자를 위한 과제가 산적해 있다. 재단과 학교 당국은 대학 '경영 진단' 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거기에 투자할 돈을 학생과 교직원들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김준호

내 남자 친구가 변했어요

2008년, 저는 18살 때 동갑인 제 남자 친구와 촛불시위에서 만났습니다. 저와 토론도 많이 했고, 서로를 지지하던 때 우리에게 입영통지서가 찾아 왔습니다. 남자 친구는 의경을 지원했습니다. 훈련소에 간 후 한 달 즈음 됐을 때 남자 친구와 통화하다가 미군기지가 우리 나라에 세워질 때마다 경제성장을 했다는 등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면회 날 제 남자 친구가 제 손에 쥐어준 것은 훈련소에서 본 시험 종이 찍지였습니다.

그 내용은 가관이었습니다. '미군은 우리에게 고마운 존재다. 우리 나라의 발전에 기여하는 존재다. 북한은 우리와 함께 통일을 이루어 나가야 할 대상인 동시에 우리를 위협하는 적이다.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필요성. 통일되는 그날까지 북한이 우리의 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와 같은 내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와 자유롭게 토론하던 남자 친구는 그곳에서 들은 이야기들 때문에 많이



G20 항의시위 탄압을 위해 G20 때 투입될 경찰 전원을 모아 특별 훈련 중인 경찰

신경민 기자

달라져 있었습니다. 한창 젊고 진보적인 생각을 많이 할 시기에 일방적인 반공 이데올로기를 주입하는 방식으로 여전히 군인들을 계속 가르치고 있는 현실이 무서웠습니다.

남자 친구는 경찰학교에서 2주 동안 계속해서 시위 진압 동영상을 봤는데, 평화적인 시위 장면은 나오지 않았고 폭력적인 시위를 폭력적인 진압으로 맞

서는 동영상을 보여 주며 폭력 진압을 정당화하는 교육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기동대로 발령받았습니다. 앞으로 G20 끝날 때까지 면회를 못한다고 합니다.

제 남자 친구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젊은이들이 군대에서 사고를 통제당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윤예진

“운동권 학생” 표적 탄압하는 서울교육대학교

최근 서울교육대학교(이하 서울교대) 당국은 교육 토론 소모임의 게시물을 수차례에 걸쳐 떼어냈다. 동시에 학생처는 모임의 회원인 “조약진[이] 운동권 학생으로 총장과 학생처장을 비롯 우리 대학 전체 교수들이 주의 깊게 지켜 보는 학생”이므로 내용을 확인 받고 도장을 찍은 뒤 게시물을 부착하라고 통보했다.

그러나 타 동아리 대자보나 광고물에도 적용하지 않는 규정을 나에게만 적용하겠다는 것은 이중 잣대고 명백한 사전 검열 시도다.

학교 측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들어 이번에 소모임이 발린 강의실은 승인을 받지 않았으니 사용 허가를 내 줄 수 없다고 했다. “앞으로 강의실 빌리는 것이 힘들 수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강의실을 대여하려는 모든 학생에게 총장 결재를 요구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고 실제로도 그렇게 하지 않아 왔다. 이 역시 이중 잣대다.

이번 사건은 사실상 학교와 정부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 온 학생에 대한 표적 탄압이고 명백히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국립대학이 헌법 정신까지 역행하며 학생 활동을 탄압하는 것은 부끄

러운 일이다.

더군다나 예비교사를 양성하는 교육대학에서 교육에 대해 토론하는 모임을 탄압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다. 이는 더 좋은 교사를 길러내겠다는 교육대학의 임무 자체를 방기하는 것 아닌가?

대학은 이번 사건에 문제를 느끼는 십여 명의 학생이 연명한 규탄 대자보조차 떼어내는 만행을 저질렀다. 학교 측은 좌파적 사상을 가진 나를 고립시키고 싶어했지만 오히려 지지는 확대되고 있다. 연명에 동참한 과학생화학부의 발의로 이번 주 중앙운영위원회의에서 탄압 대응 안건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러한 지지에 기초해 나는 앞으로 학교측의 탄압에 맞서 단호하게 투쟁해 나갈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최근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앞으로 거점 국립대학 법인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교육대학 구성원의 총장 선출 권한을 축소할 계획이다. 교대와 사범대의 인원도 감축할 예정이다. 학교 당국은 이에 대한 저항의 구심이 형성되는 것을 막으려고 진보적 학생의 활동을 탄압하는 것이다.

따라서 학내 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하는 학생들은 총장 선출제 축소, 대학 구조조정 반대 투쟁도 함께해야 한다.

조익진

‘반올림’과 대학생들의 간담회조차 불허한 성균관대학교

지난 10월 9일 성균관대학교에서는 유학·동양학부 사회과학학회 등의 주최로 삼성 반도체 노동자 인권 지킴이 ‘반올림’과 대학생들의 간담회가 열릴 예정이었다.

그런데 학교가 “민감한 문제라 강의실 사용을 허가해 줄 수 없다. 뒷사람들도 간담회 홍보물을 본 상태라 허가해 주기 어려운 상태”라며 갑자기 간담회 장소 대여를 불허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주최 측은 “성균관대는 삼성기업 소속 기관입니까?” 하고 강하게 비판했다.

성균관대의 학내 민주주의, 학생 자치, 연대활동 탄압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삼성그룹 이근희 부자의 변칙 증

여세습을 풍자하는 만화가 실렸다는 이유로 교지 《성균》5천 부 전량을 배포 시작 두 시간여 만에 강제 회수한 일도 있었다. 지난 1학기 축제 때는 중앙동아리 ‘노동문제연구회’가 주최한 철거민 연대 주점을 방해하기도 했다. 반면에 기업들은 학내에서 버젓이 부스를 차리고 홍보를 한다.

이번 일은 기업이 대학을 지배했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대학의 기업화와 학내 민주주의 탄압은 무관하지 않다. 우리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대학 기업화에 반대해야 한다.

임준형

2009 개정교육과정은 ‘수정’이 아니라 폐기돼야

41호 ‘MB 교육:입시 경쟁↑ 교원 신규 임용↓’ 기사에 이견이 있다. 기사의 필자인 나지현 씨는 2009 개정교육과정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009 개정교육과정의 핵심이 집중이수제와 교과군(성격이 비슷한 과목을 묶은 것)내에서 20퍼센트를 증감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 둘 모두가 영어·수학 몰입교육과 교사 구조조정 효과가 있기 때문에 수정이 아닌 폐기가 올바른 요구다. 이 때문에 전교조와 진보적 교육단체들은 ‘수정’이 아닌 ‘전면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신규 임용 감소가 ‘학교가 교육과정을 20퍼센트까지 줄일 수 있게 됐기 때문’이라는 설명은 부정확하다. 실제로는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다. 결과적으로 영어와 수학 수업시간은 늘어나고 사회,도덕, 체육, 예술 시간은 줄어드는 것이다.

하지만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수업시간이 늘어나는 영어와 수학의 신규임용

은 감소했다. 더 많은 교사가 필요함에도 뽑지 않는 것은 비정규직 교사로 채우겠다는 것이다. 학생과 예비교사에게 경쟁만을 강요하는 2009 개정교육과정이 전면 폐기되도록 싸워야 한다.

김연오



10월 9일 예비교사한미당에서 개정교육과정 '중단'을 요구하는 사범대·교대 학생들

조영오 기자

북한의 3대 권력 세습



민주노동당의 혼란스럽고 군색한 침묵

북한의 3대 권력 세습을 두고 <경향신문>과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 간 논쟁을 비롯해 진보진영 내에서도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다함께 운영위원이자 계간 <마르크스21> 편집자인 **김하영**이 고전적 마르크스주의 관점에서 이 쟁점을 살펴본다. 김하영 운영위원은 <국제주의 시각에서 본 한반도>(책벌레)의 저자이기도 하다.

김하영 운영위원

북한의 3대 권력 세습이 진보진영 내에 뜨거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정희 대표와 민주노동당 지도부는 북한 3대 세습에 대해 “말하지 않는 것”을 택했다. 그러나 침묵의 근거는 혼동으로 가득하고 군색하다.

첫째, 이정희 대표와 민주노동당 지도부는 북한 3대 세습을 비판하는 것이 우파와 그 논리에 힘을 보태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큰 착각이다. 오히려 진보진영의 다수가 이런 문제에 침묵해 왔기 때문에 우파가 인권과 민주주의를 자신의 전유물인 양 행사하며 기세등등할 수 있었던 것이다.

진보진영이 북한 3대 세습을 선포하게 비판해야, 유명한 사건으로나 삼성 이재웅 사례로나 북한 세습을 비난할 처지가 못 되는 우파의 위선을 날카롭게 들춰낼 수 있고, 우파가 사회주의를 소름끼치는 독재와 같은 것으로 취급함으로써 계속 진보진영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것을 좌절시킬 수 있다.

북한을 비판하면 우파에게 득이 될 뿐이라거나 심지어 국정원 또는 CIA 첩자 취급하는 정통 자주파의 눈범은 남한 정권과 체제를 비판하려면 ‘북한 가서 살라’고 말하는 우파의 논법을 뒤집어 놓은 것과 같다.

둘째, 진보진영의 북한 세습 비판을 제국주의적 개입 정책과 뒤섞는 것도 심각한 혼동이다.

민주노동당 세계상연구소는 북한 3대 세습 비판이 또 하나의 “오리엔탈리즘”이라며, 그것이 “19세기과 20세기 유럽 열강의 아시아 침략에 정당성을 부여했다”는 에드워드 사이드의 말을 빌렸다. 박경순 세계상연구소 부소장은 더 노골적으로, “자신의 비관과 가치관을 상대방에게 강요하는 것이야말로 부시 행정부의 일방주의적 패권주의 사고방식과 하등 다르지 않다”고 했다.

그러나 북한 체제를 비판하더라도 얼마든지 미국의 대북 제재와 군사적 위협에 일관되게 반대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다함께와 <레프트21>이 지금까지 한결같이 취해온 입장이다.

진보진영은 제국주의적 개입을 일관되게 반대하면

서 북한의 민주주의가 제국주의의 개입이 아니라 북한 민중 자신에 의해서만 정취될 수 있다고 주장해야지, 대북 압박을 반대하기 위해 비민주적인 북한 정권마저 두둔하는 데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

셋째, 민주노동당 지도부는 남북관계를 위해 북한 세습(뿐 아니라 북한 문제 일체)을 비판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갖대로 삼아 내정 불간섭, 체제 인정과 존중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진보진영의 북한 세습 비판이 급작스럽게 남북관계를 악화시키고 평화를 해칠 것처럼 몰아세우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주류 정치 내 진보파의 영향력이 크지도 않은데 말이다.

게다가 남북관계는 남북 당국 상호 관계의 누적적 결과에 의해서가 아니라 더 복잡한 동북아 정세와 관련국들의 이해관계 속에서 결정되곤 했다. 순진한 관점에서만 보면, 이명박 정부와 북한 당국이 서로 거칠게 비난하다가 몇 달 전 느닷없이 비밀접촉설이 흘러나온 것에 당황할 수 있다.

사실, 북한 당국은 상호 비방을 일삼아 온 남한 독재정권들과도 술하게 비밀외교를 했다. 임구성 씨가 1989년 평양에서 열린 세계청년학생축전 개막식에 전대협(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대표로 입장할 때 비밀 회담을 위해 평양을 방문 중이던 당시 청와대 정책보좌관 박철언이 김일성·김정일과 함께 늘라도 경기장 주석단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은 남북관계사의 가장 극적인 장면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물론 남북한이 대립과 충돌이 아니라 관계개선으로 나아가는 것이 더 낫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특히 통일을 종식하는 민주노동당은 통일 한반도의 사회상이 어떤 것인지, 진보의 비전이 무엇인지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불간섭과 상호 체제 존중이라는 미명 아래 북의 세습을 은근히 두둔한다면, 남북 민중 모두에게서 결코 매력적인 대안으로 지지받지 못하고 진보에 대한 환멸감만 안겨줄 것이다. 남한의 진보진영은 당국자 외 교관계가 아니라 노동계급과 피억압 민중의 처지와 투쟁이라는 관점에서 북한 피억압 대중과의 연대를 우선에 놓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면 정몽 자주파는 북한은 남한과 달리 당 권료와 피억압 대중으로 나눌 수 없는 사회라고 반박할 것이다. 그러나 남한과 꼭 마찬가지로 억압 기관들의 존재가 사회적 분단을 방증한다. 억누를 다수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왜 그토록 육중한 억압 기관들과 끔찍한 처벌이 필요하라는 말인가?

셋째, 민주노동당 세계상연구소는 북한의 3대 세습을 두고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옳고 그름의 평가는 물론이고 후계 구도 자체도 설불리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심지어 세계상연구소 긴급토론회에서 박경순 부소장은 김정일이 김정일의 아들인지도 알 수 없다더니 어떻게 북한 주민들의 의사는 알았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후계자로서 자질과 능력을 갖추는데 수령과 혈연관계라고 해서 주저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북한 당국의 주장도, 민주노동당 지도자가 그것을 그대로 옮기는 것도 낯뜨겁다. 김정일이 김정일의 아들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스위스 왕위하라는 특권을 누리고, 바다에서 여행을 쉴지 않고도 일약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이 될 수 있었겠는가?

다섯째, 이정희 대표는 진보(언론) 안에도 스펀더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심지어 세계상연구소 긴급토론회에서 박경순 부소장은 김정일이 김정일의 아들인지도 알 수 없다더니 어떻게 북한 주민들의 의사는 알았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셋째, 민주노동당 세계상연구소는 북한의 3대 세습을 두고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옳고 그름의 평가는 물론이고 후계 구도 자체도 설불리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심지어 세계상연구소 긴급토론회에서 박경순 부소장은 김정일이 김정일의 아들인지도 알 수 없다더니 어떻게 북한 주민들의 의사는 알았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다섯째, 이정희 대표는 진보(언론) 안에도 스펀더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심지어 세계상연구소 긴급토론회에서 박경순 부소장은 김정일이 김정일의 아들인지도 알 수 없다더니 어떻게 북한 주민들의 의사는 알았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국가보안법 법적 안의 논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며 비장하게 침묵을 선언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 비판을, 지배계급에게 “사상 이 불온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받아 국가보안법 처벌을 피하려는 비겁한 행위에 은근히 빚었다. 불쾌한 일반화가 아닐 수 없다.

북한을 비판함으로써 지배계급에게 합리적 진보임을 인정받고 싶어 하는 일부 진보 세력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민주노동당 자주파의 상당수도 국가보안법으로 수감된 당원을 제명함으로써 이른바 “공당”으로 거듭나고자 타협하지 않았던가). 그들은 남한의 부르주아 민주주의를 북한보다 우월하다고 여기며 남한 사회의 변혁 전망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나 진보진영 안에는 다함께와 <레프트21>처럼 고전적 마르크스주의의 관점에서 북한을 비판하는 단체도 있다. 다함께와 <레프트21>은 북한을 남한과 꼭 마찬가지로 착취적이고 억압적인 사회라고 보며 남북한 모두에서 근본적 사회 변혁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진보진영 안에는 다함께와 <레프트21>처럼 고전적 마르크스주의의 관점에서 북한을 비판하는 단체도 있다. 다함께와 <레프트21>은 북한을 남한과 꼭 마찬가지로 착취적이고 억압적인 사회라고 보며 남북한 모두에서 근본적 사회 변혁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진보진영 안에는 다함께와 <레프트21>처럼 고전적 마르크스주의의 관점에서 북한을 비판하는 단체도 있다. 다함께와 <레프트21>은 북한을 남한과 꼭 마찬가지로 착취적이고 억압적인 사회라고 보며 남북한 모두에서 근본적 사회 변혁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진보진영 안에는 다함께와 <레프트21>처럼 고전적 마르크스주의의 관점에서 북한을 비판하는 단체도 있다. 다함께와 <레프트21>은 북한을 남한과 꼭 마찬가지로 착취적이고 억압적인 사회라고 보며 남북한 모두에서 근본적 사회 변혁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진보진영 안에는 다함께와 <레프트21>처럼 고전적 마르크스주의의 관점에서 북한을 비판하는 단체도 있다. 다함께와 <레프트21>은 북한을 남한과 꼭 마찬가지로 착취적이고 억압적인 사회라고 보며 남북한 모두에서 근본적 사회 변혁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진보진영 안에는 다함께와 <레프트21>처럼 고전적 마르크스주의의 관점에서 북한을 비판하는 단체도 있다. 다함께와 <레프트21>은 북한을 남한과 꼭 마찬가지로 착취적이고 억압적인 사회라고 보며 남북한 모두에서 근본적 사회 변혁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진보진영 안에는 다함께와 <레프트21>처럼 고전적 마르크스주의의 관점에서 북한을 비판하는 단체도 있다. 다함께와 <레프트21>은 북한을 남한과 꼭 마찬가지로 착취적이고 억압적인 사회라고 보며 남북한 모두에서 근본적 사회 변혁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진보진영 안에는 다함께와 <레프트21>처럼 고전적 마르크스주의의 관점에서 북한을 비판하는 단체도 있다. 다함께와 <레프트21>은 북한을 남한과 꼭 마찬가지로 착취적이고 억압적인 사회라고 보며 남북한 모두에서 근본적 사회 변혁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진보진영 안에는 다함께와 <레프트21>처럼 고전적 마르크스주의의 관점에서 북한을 비판하는 단체도 있다. 다함께와 <레프트21>은 북한을 남한과 꼭 마찬가지로 착취적이고 억압적인 사회라고 보며 남북한 모두에서 근본적 사회 변혁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진보진영 안에는 다함께와 <레프트21>처럼 고전적 마르크스주의의 관점에서 북한을 비판하는 단체도 있다. 다함께와 <레프트21>은 북한을 남한과 꼭 마찬가지로 착취적이고 억압적인 사회라고 보며 남북한 모두에서 근본적 사회 변혁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진보진영 안에는 다함께와 <레프트21>처럼 고전적 마르크스주의의 관점에서 북한을 비판하는 단체도 있다. 다함께와 <레프트21>은 북한을 남한과 꼭 마찬가지로 착취적이고 억압적인 사회라고 보며 남북한 모두에서 근본적 사회 변혁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진보진영 안에는 다함께와 <레프트21>처럼 고전적 마르크스주의의 관점에서 북한을 비판하는 단체도 있다. 다함께와 <레프트21>은 북한을 남한과 꼭 마찬가지로 착취적이고 억압적인 사회라고 보며 남북한 모두에서 근본적 사회 변혁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진보진영 안에는 다함께와 <레프트21>처럼 고전적 마르크스주의의 관점에서 북한을 비판하는 단체도 있다. 다함께와 <레프트21>은 북한을 남한과 꼭 마찬가지로 착취적이고 억압적인 사회라고 보며 남북한 모두에서 근본적 사회 변혁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진보진영 안에는 다함께와 <레프트21>처럼 고전적 마르크스주의의 관점에서 북한을 비판하는 단체도 있다. 다함께와 <레프트21>은 북한을 남한과 꼭 마찬가지로 착취적이고 억압적인 사회라고 보며 남북한 모두에서 근본적 사회 변혁이 필요하다고 본다.

“국가보안법 법적 안의 논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며 비장하게 침묵을 선언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 비판을, 지배계급에게 “사상 이 불온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받아 국가보안법 처벌을 피하려는 비겁한 행위에 은근히 빚었다. 불쾌한 일반화가 아닐 수 없다.

북한을 비판함으로써 지배계급에게 합리적 진보임을 인정받고 싶어 하는 일부 진보 세력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민주노동당 자주파의 상당수도 국가보안법으로 수감된 당원을 제명함으로써 이른바 “공당”으로 거듭나고자 타협하지 않았던가). 그들은 남한의 부르주아 민주주의를 북한보다 우월하다고 여기며 남한 사회의 변혁 전망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나 진보진영 안에는 다함께와 <레프트21>처럼 고전적 마르크스주의의 관점에서 북한을 비판하는 단체도 있다. 다함께와 <레프트21>은 북한을 남한과 꼭 마찬가지로 착취적이고 억압적인 사회라고 보며 남북한 모두에서 근본적 사회 변혁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진보진영 안에는 다함께와 <레프트21>처럼 고전적 마르크스주의의 관점에서 북한을 비판하는 단체도 있다. 다함께와 <레프트21>은 북한을 남한과 꼭 마찬가지로 착취적이고 억압적인 사회라고 보며 남북한 모두에서 근본적 사회 변혁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진보진영 안에는 다함께와 <레프트21>처럼 고전적 마르크스주의의 관점에서 북한을 비판하는 단체도 있다. 다함께와 <레프트21>은 북한을 남한과 꼭 마찬가지로 착취적이고 억압적인 사회라고 보며 남북한 모두에서 근본적 사회 변혁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진보진영 안에는 다함께와 <레프트21>처럼 고전적 마르크스주의의 관점에서 북한을 비판하는 단체도 있다. 다함께와 <레프트21>은 북한을 남한과 꼭 마찬가지로 착취적이고 억압적인 사회라고 보며 남북한 모두에서 근본적 사회 변혁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진보진영 안에는 다함께와 <레프트21>처럼 고전적 마르크스주의의 관점에서 북한을 비판하는 단체도 있다. 다함께와 <레프트21>은 북한을 남한과 꼭 마찬가지로 착취적이고 억압적인 사회라고 보며 남북한 모두에서 근본적 사회 변혁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진보진영 안에는 다함께와 <레프트21>처럼 고전적 마르크스주의의 관점에서 북한을 비판하는 단체도 있다. 다함께와 <레프트21>은 북한을 남한과 꼭 마찬가지로 착취적이고 억압적인 사회라고 보며 남북한 모두에서 근본적 사회 변혁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진보진영 안에는 다함께와 <레프트21>처럼 고전적 마르크스주의의 관점에서 북한을 비판하는 단체도 있다. 다함께와 <레프트21>은 북한을 남한과 꼭 마찬가지로 착취적이고 억압적인 사회라고 보며 남북한 모두에서 근본적 사회 변혁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진보진영 안에는 다함께와 <레프트21>처럼 고전적 마르크스주의의 관점에서 북한을 비판하는 단체도 있다. 다함께와 <레프트21>은 북한을 남한과 꼭 마찬가지로 착취적이고 억압적인 사회라고 보며 남북한 모두에서 근본적 사회 변혁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진보진영 안에는 다함께와 <레프트21>처럼 고전적 마르크스주의의 관점에서 북한을 비판하는 단체도 있다. 다함께와 <레프트21>은 북한을 남한과 꼭 마찬가지로 착취적이고 억압적인 사회라고 보며 남북한 모두에서 근본적 사회 변혁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진보진영 안에는 다함께와 <레프트21>처럼 고전적 마르크스주의의 관점에서 북한을 비판하는 단체도 있다. 다함께와 <레프트21>은 북한을 남한과 꼭 마찬가지로 착취적이고 억압적인 사회라고 보며 남북한 모두에서 근본적 사회 변혁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진보진영 안에는 다함께와 <레프트21>처럼 고전적 마르크스주의의 관점에서 북한을 비판하는 단체도 있다. 다함께와 <레프트21>은 북한을 남한과 꼭 마찬가지로 착취적이고 억압적인 사회라고 보며 남북한 모두에서 근본적 사회 변혁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진보진영 안에는 다함께와 <레프트21>처럼 고전적 마르크스주의의 관점에서 북한을 비판하는 단체도 있다. 다함께와 <레프트21>은 북한을 남한과 꼭 마찬가지로 착취적이고 억압적인 사회라고 보며 남북한 모두에서 근본적 사회 변혁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진보진영 안에는 다함께와 <레프트21>처럼 고전적 마르크스주의의 관점에서 북한을 비판하는 단체도 있다. 다함께와 <레프트21>은 북한을 남한과 꼭 마찬가지로 착취적이고 억압적인 사회라고 보며 남북한 모두에서 근본적 사회 변혁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진보진영 안에는 다함께와 <레프트21>처럼 고전적 마르크스주의의 관점에서 북한을 비판하는 단체도 있다. 다함께와 <레프트21>은 북한을 남한과 꼭 마찬가지로 착취적이고 억압적인 사회라고 보며 남북한 모두에서 근본적 사회 변혁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진보진영 안에는 다함께와 <레프트21>처럼 고전적 마르크스주의의 관점에서 북한을 비판하는 단체도 있다. 다함께와 <레프트21>은 북한을 남한과 꼭 마찬가지로 착취적이고 억압적인 사회라고 보며 남북한 모두에서 근본적 사회 변혁이 필요하다고 본다.

황장엽 사망

남북한 모두에서 민중을 억압한 자

황장엽 사망

전 북한 노동당 비서 황장엽이 지난 10일 사망했다.

황장엽이 사망하자 보수 우익들은 일제히 애도하고 있다. <중앙일보> 등은 황장엽을 ‘북한의 민주화와 민족의 평화통일을 염원했던 망명객’이라고 추켜세웠다. 이명박도 그의 사망이 “우리 역사의 아픔”이라며 그에게 훈장까지 줬다.

그러나 황장엽은 한반도 민중의 애도를 받을 자격이 없다.

북한에 있을 때 황장엽은 북한 지배계급의 일원으로, 주체사상을 통해 북한 권료 독재를 옹호한 나팔수였다.

북한에서 주체사상은 권료집단의 이익을 위해 노동자와 농민을 착취하는 체제를 합리화하는 지배 이데올로기였다. 황장엽은 1950년대 ‘천리마 운동’, ‘청산리 방법’ 등 노동자들의 착취를 강화하려는 북한 권료들의 노력을 두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주체적인 혁명적 사업’이라며 칭송했다.

이처럼 총살까지 권료지배체제를 정당화한 덕분에 그는 40세에 김일성종합대학 총장에 임명됐고, 이후에 최고인민회의 의장과 노동당 비서 자리에 오르는 등 출세 가도를 달릴 수 있었다.



우익은 비록 황장엽이 주체사상을 체제화했다. 그의 의도와 다르게 김일성과 김정일 등이 이를 독재와 세습 합리화의 도구로 악용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북한 권력에서 승상승구하던 1970~80년대에 그는 김일성 수령론 이론화에 앞장섰다. 그리고 “수령이 개혁한 혁명 위업은 한 세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를 이어 계속”해야 한다고 권력 세습을 정당화한 자가 바로 황장엽이다.

변신

북한에서 40년 넘게 북한 인민을 착취하고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지배계급의 일원이었던 황장엽이 1997년 남한으로 망명해 남한 보수 우익의 이데올로기로 변신한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

황장엽이 망명한 시점은 공교롭게도 1996~97년 민주노동의 파업이 터진 직후였다. 당시에 그는 “시위와 파업 같은 일제 폭력적인 방법을 엄금하여야 한다. 폭력을 고집하는 자는 총살까지 하여야 한다”며 남한 노동운동을 폭독히 탄압하라고 촉구했다.

그 후에도 그는 남한에서 민주적 권리 탄압을 지지했다. 2004년에 그는 남한 우익의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선전에 동참했으며, 송두세 교수에 대한 마녀사냥에도 일조한 바 있다.

최근에도 그는 천안함 사태를 두고 “누워서도 김정일이 한 것이라는 것을 아는데 남한에는 참 한심한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다”며 이명박 정권의 ‘북풍’을 두둔해 주고, 북한 인민들을 고통스럽게 할 미국의 대북 압박과 제재를 촉구했다.

북한에서도 지배 권료로서 ‘인민의 적’이었으며, 남한에 망명한 후에는 남한 ‘인민의 적’이었다. 이 자의 욕망을 애도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

김영익

지도자 대물림하는 북한은 진정한 사회주의 사회가 아니다

10월 12일 다함께의 성명서로 발표된 이 글은 **최일봉** 다함께 운영위원이 대표 집필했다.

북한의 권력 대물림이 전 세계의 웃음거리가 돼 있다. 물론 자식에게 권력을 세습해 줬거나 세습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다양한 독재자들에게는 웃음거리가 아닐 게다. 3대 세습은 확실히 유별나다. 하지만 3대나 2대나는 진정한 이슈가 아니다. 진정한 이슈는 — 적어도 좌파에게는 — 사회주의 하에서 세습이 있을 수 있느냐는 점이다.

김정은이 능력 면에서 지도자가 될 자격이 충분하기에 지도자 자리를 물려받는 것 아니겠느냐며 대물림을 정당화하는 정통 자주파의 주장은 진정한 사회주의와 아무 관계 없다. 1871년 파리 코뮌의 공무원들은 자유 선거로 선출됐고, 노동자 평균 임금 수준의 봉급을 받았고, 무능이나 부패가 드러나면 즉각 소환될 수 있었다. 반면 김정은은 자기 부친과 그 핵심 측근 외에는 아무에 의해 선출되지도 않았고, 해외 여행이 불허된 보통의 노동자들과 대조적으로 스위스 학교를 다닌 일 등 큰 특권을 누리고 있고, 아래로부터의 대중 혁명에 의하지 않는 한 누군가에게 소환될 일도 없을 것이다.

제국주의 이론의 결여와 엘리트주의

일부 자유주의자들과, 이정희 대표를 비롯한 민주노동당 지도부와 진보신당 다수 지도자들 같은 개혁주의 지도자들은 마르크스주의적 제국주의론의 관점이 결여돼 있기도 하지만 피억압 대중의 삶과 그들 자신의 저항이라는 관점도 결여돼 있다. 그 대신 그들은 남북관계 문제를 북한 정권 달래기라는 국가 간 외교의 관점에서 다루고 있다.

그러나 남북관계를 위해 북한의 권력 세습을 비판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은 순진하다. 북한 정권 비판 여부는 남북관계와 별로 큰 관계가 없다. 남북의 지배자들은 서로 비난을 주고받다가 돌연 유화 국면으로 돌아서기를 수도 없이 거듭했다. 박정희와 김일성의 7·4공동성명, 전두환 재임시 박철언이 전두환 특사이자 밀사로 북한에 간 일, 노태우 정권이 대체로 북한에 유화적인 자세를 취한 일,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이 김일성 사망이 아니었더라면 1994년 김영삼과 김일성 사이에 열릴 뻔했던 사실,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체인 1998~99년은 북한 잠수함 사건과 제1차 서해교전 등으로 남북관계가 극도로 경색돼 있었다는 사실, 대북 화해·협력을 추구하던 김대중 정권이 2002년에는 북한과 사이가 극도

로 나빠졌던 일 등을 들 수 있다. 오히려 남북관계는 훨씬 더 폭넓은 제국주의 간 동아시아 패권 경쟁 문제와 관계가 있다.

백보 양보해 설사 북한 권력 구조 비판을 삼가는 것이 남북관계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일지라도 그것은 남북 지배자들의 일일 뿐이다. 남북 지배자들이 대체로 화해·협력 관계에 있던 2000년 이후 7년간 남한은 물론 북한의 노동계급과 그 밖의 피억압 집단들에게 착취와 억압이 완화됐던가? 김대중과 노무현 재임시 비정규직화 등 신자유주의 노동 유연화가 가속됐고, 구속 노동자 수는 그전 어느 정권 하에서보다 많았다. 뿐만 아니라 평택 미군기지 문제나 한미 FTA 문제로 항의하던 사람들을 혹독하게 탄압하고 특히 후자에 대한 항의 운동이 일어나고부터는 대중 집회가 거의 불허됐다.

적대적 공생 관계

정통 자주파는 민주대연합의 이름으로 자유주의자들과 사회민주주의자들과 ‘연대·연합’을 추구하고 있다. 2000년대 한국판 인민전선 정책인 셈이다. 고전적 인민전선 시기에 페이비언 협회의 조지 버너드 쇼 등을 비롯한 많은 서구 자유주의 지식인들이 소련에 우호적인 태도를 취한 한편 스탈린주의자들은 자유주의자들과 사회민주주의자들의 외교론적 관점에 편승해 노동계급과 피억압 민중의 자기 해방이라는 진정한 사회주의 원칙을 저버렸다.

정통 자주파의 생각과 달리 ‘적의 적은 친구’가 아닌 경우도 흔하다. 이명박과 한나라당 때문에 손학규 등 민주당 지도자들을 친구로 보는 것에 반대하는 노동자들과 노동운동 활동가들이 괜히 많은 게 아니다. 바로 몇 년 전에만 해도 민주당·열린우리당(참여당)이 노동자들을 좀더 착취하려는 자본가들의 친구가 기꺼이 돼 줬던 기억 때문이다. 적의 적이 친구가 아닌 좀더 극단적인 사례는 조갑제다. 조갑제는 이명박이 “더는 우리 팬이 아니다”(4월 9일치 오마이뉴스), “탄핵돼 해야 해야 한다”(9월 8일치 인터넷 경향신문)고 했다. 그렇다고 조갑제가 우리 진보진영 편인가? 마르크스는 자본가들을 ‘서로 싸우는 형제들’로 묘사했다. 자본가들은 노동자 착취와 억압에 함께하는 동시에, 이윤을 좀더 많이 차지하려고 서로 싸운다. 그러다 보니 자본가 계급의 대표자들도 서로 아웅다웅하는 것이다. 피억압자들과 노동계급의 자기 해방에 헌신하는 진정으로 민주적인 사회주의자라면 지배자들의 일부를 편들 수 없을 것이다.

적의 적이 친구가 아닌 경우는 북한에



북한 관료들이 말하는 ‘우리식 사회주의’는 노동자·민중을 억압·착취하는 국가자본주의 체제일 뿐이다.

도 해당한다. 북한이 남한과 꼭 마찬가지로 억압적이고 착취적임은 굳이 예증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또한 북한이 남한과 때로 싸우고 때로 협력했음도 예증이 필요 없다. 북한과 남한이 ‘서로 싸우는 형제’ 같다는 점은 일찍이 ‘북풍’, ‘총풍’ 사건으로 떠들썩하던 1995~97년경에 지각 있는 일부 남한 진보 지식인들이 ‘적대적 공생관계’ 등의 말로써 지적한 바다.

사회주의가 아니라 국가자본주의

어떻게 북한은 남한과 이런 관계일 수 있는가? 바로 북한 체제의 진정한 성격이 마르크스가 말한 사회주의와 아무 관계 없고 오히려 남한처럼 노동 착취·억압 체제이기 때문이다. 전면적으로 국유화된 경제 체제를 ‘사회주의’라고 부르는 것은 마르크스의 사회주의관과 아무 관계 없다. 몸소 초안을 쓴 제1인터내셔널 규약(1864년 10월) 첫 문장에서 마르크스는 “노동계급의 해방은 노동계급 자신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 국가 수립 과정에서 노동계급은 아무런 구실도 하지 못했다. 1989년에 와해된 동유럽 ‘인민민주주의’ 체제들처럼 소련 군대가 북한 국가를 세웠다. 산업을 국가가 소유·통제하지만, 국가를 통제하는 건 북한 노동계급이 아니다. 북한 노동계급은 권력은커녕 권리도 없다. 민주적 권리도 없고, 노동기본권도 없다. 그들은 생산수단과 생산물과 생산 방식으로부터 소외돼 있다. 전형적으로 마르크스가 말한 ‘노동의 소외’인 것이다.

북한 노동계급의 일부는 굶주림과 궁핍을 겪고 있다. 반면 북한 국가는 미국의 제국주의적 위협을 이유로 핵무기와 군비를, 또 이를 위해 중공업 생산수단을 축적하고 있다. 이는 마르크스가 《자본》에서 언급한 상황, 즉 ‘한편에 자본의 축적, 다른 한편에 빈곤의 축적’이라는 상황이다. 세계 자본주의·제국주의 체제의 압력을 받아 북한 체제도 그와 쏙 빼달게 된 것이다. 세간의 경박한 규정처럼 북한이 봉건제라면 핵무기와 중공업은 있을 수 없다.

자본주의에는 시장경제와 사유재산,

상품이 지배하는 유형만 있는 게 아니다. 만일 삼성이나 현대, LG, 포스코 등 남한 노동자들이 일하는 기업이 거의 다 한국 전력이나 토지주택공사 같은 공기업이 되고, 심지어 편의점들도 국유화되고, 우리는 여전히 회사 경영에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는 처지에 있다고 가정해 보자. 그리고 국가는 여전히 우리와 완전히 동떨어진 특권적 집단이 좌지우지하면서 다른 국가와 경제적·군사적 경쟁을 하면서 우리를 계속 착취하고 억압한다고 가정해 보자. 이것을 (파인설 타임스)나 (뉴욕 타임스)는 사회주의라고 부르겠지만, 마르크스가 말한 사회주의와 별 관계 없음은 명백하다. 우리는 여전히 마르크스가 말한 ‘임금 노예’이고 국가 관리들은 여전히 지배계급이다. 비록 사기업 소유주는 사라졌지만 말이다. 이것은 193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 특히 제2차세계대전 중에 다양한 나라에서 품이었던 경제 구조와 많이 닮았다. 심지어 아타-조두리라는 경제학자는 “사회주의 블록 바깥의 어느 국가도 투자 가능한 경제적 자원에 대한 이런[남한의] 통제 정도에 이르지 못했다”고 했을 만큼 박정희 치하의 한국도 ‘사회주의적’이었다. 이런 체제에 대한 가장 적합한 명칭은 국가자본주의다.

다함께와 우익은 어떻게 다른가?

북한은 사회주의 사회가 아니라 자본주의의 한 변형태인 관료적 국가자본주의 사회다. 남한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비민주적 체제이기에도 세습 같은 일도 비슷하게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나 세습 문제에 가려 북한 사회의 성격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설사 이견이 이재용에게 삼성을 물려주지 않고 전 문경영인에게 물려준다 한들 삼성 노동자들의 ‘임금 노예’ 처지는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노동계급의 해방과 이를 통한 다른 모든 피억압 민중의 해방이다.

조갑제나 엇그제 죽은 황장엽 같은 우익도 북한 민중의 해방에 대해 얘기한다.

그러나 그들은 결정적으로 다음과 같은 점에서 우리의 고전 마르크스주의적 입장과 다르다.

- (1) 남한 사회 체제와 그 지배계급에 대해서는 비판하지 않는다. 미국 제국주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 (2) 북한 노동계급의 자기 해방, 즉 지배 관료를 혁명으로 타도하고 노동계급 자신의 국가 기구들을 (노동자 평의회 형태) 세울 필요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오히려 우익은 미국 군대나 남한 군대 같은 외부 세력이 북한 주민을 해방시킬 수 있다고 믿는다.
- (3) 우익의 강령은 남한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북한에 대해서도 시장 자본주의다. 반면 고전 마르크스주의적 북한 변혁 강령은 사회주의다. 물론 마르크스가 말한 (아래로부터의) 사회주의다.

진정으로 ‘북한 바로 알기’가 필요하다

1988년 자주파는 ‘북한 바로 알기’가 필요하다고 소리 높여 외쳤다. 지금이야 말로 북한을 바로 알아야 한다. 진정한 사회주의가 무엇인지와 직결된 문제이기에도 그렇거니와, 세계적으로 자본주의가 1930년대 이래로 가장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그 어느 때보다 자본주의의 대안으로서 사회주의가 주창돼야 하는 상황에서 북한이라는 가짜 사회주의는 남한의 좌파에게 큰 부담을 안겨 주고 있다. 만약 북한이 사회주의 사회라면 도대체 누가 사회주의를 거들떠나 볼 것인가? ‘사회주의’라는 말 앞에 ‘왜곡된’, ‘기형적’, ‘변질된’, ‘국가’, ‘봉건적’, ‘전제군주적’ 따위의 수식어를 붙여도 사정은 달라지지 않는다.

진짜 사회주의는 북한과 아무 관계가 없다. 진짜 사회주의 사회는 노동계급이 정치적·경제적 의사결정을 하는 사회다. 그럼으로써 이윤이나 자본 축적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필요가 지배적인 척도가 되는 사회다. 그런 사회는 노동계급의 자기 해방 투쟁으로만 이룰 수 있다. 그 길에 함께하자.



‘위대한 장군님’은 독재자로, ‘선군정치’는 군사독재로 나타나고 있다.

사진 출처: AP, Getty Images

사진 출처: AP, Getty Images

민주노동당 지도부가 손학규 당선을 “환영”해야 했나

이번 전당대회에서 민주당은 당헌에 “보편적 복지”를 넣었고, 강령에서 “중도 개혁주의”를 삭제했다. 세계경제 위기와 촛불항쟁 등을 거치며 지속되고 있는 대중의 급진화에 기회주의적으로 편승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손학규가 당대표로 당선된 것은 민주당의 색깔 바꾸기가 그다지 신선하지도 않다는 것을 보여 준다. 손학규가 대표로 당선한 비결은 기껏해야 ‘비호남’이라는 것밖에 없다.

손학규는 14년 동안 한나라당의 정책을 충실히 지지했고, ‘사상 전향’을 분명히 한 적도 없는 한나라당 출신이다. 그는 한나라당 탈당 직전까지 “나는 한나라당 자체”라고 했다.

그러다가 2007년 한나라당에서 대통령 후보가 될 가능성이 희박해지자 갑자기 민주당으로 말을 갈아 타고 대선 후보 경선에 출마했고 이제는 당대표가 됐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차이가 얼마나 보잘 것 없는지 보여 주는 대목이다.

손학규의 오랜 정치적 신념은 ‘보편적 복지’와 거리가 멀다. 그의 견해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책 <진보적 자유주의의 길>에서 손학규는 자신의 ‘진보적 자유주의’가 “한국판 제3의 길”이라고 했다.

“나는 한나라당 자체”

‘제3의 길’은 진보의 탈을 쓰고 신자유주의를 적극 도입하는 길일 뿐이라는 점이 영국 블레어 정부를 통해 입증됐다. 사실 손학규의 노선은 서유럽의 우파 사회민주주의조차도 못 된다. 후자는 보수당과 흡사한 정책을 구사했지만 조직 노동계급의 지지를 받았다. 반면, 손학규는 조직 노동계급 기반이 전혀 없다.

그리고 손학규는 자신의 책에서 레이건과 대척의 민영화, 복지 축소, 노동운동에 대한 강력한 탄압이 경제를 살렸다고 칭찬했다. 그는 무상교육, 실업수당, 주택보조금, 높은 의료보장 등 복지정책이 ‘영국병’을 낳았다는 대처



10월 11일 민주노동당을 방문한 손학규를 환대하는 이정희 대표. ‘반한나라’를 내세우면서, 반성도 안 한 한나라당 출신을 환영하는 모순이 민주대연합론의 현주소다.

의 주장을 되풀이하며 “일할 능력이 있으면서도 일하지 않고 기회를 찾지도 않는 사람에게는 냉혹하게 쓴 맛을 보여 주는 것”이 국가의 구실이라고 썼다.

이런 맥락에서 그는 ‘보편적 복지’와 대비되는 개념인 ‘시혜적 복지’와 “생산적 복지”를 대안으로 내세웠다. 이런 오랜 소신 때문인지 이번 전당대회에서 손학규는 복지·진보 담론에 가장 거리를 둔 후보였다.

손학규는 한미FTA도 적극 지지했

다. 한미FTA 체결을 적극 지지했던 정동영이 이제야 일부 조항 재협상 요구를 하며 뒷북치는 것도 문제인데, 손학규는 “협상은 상대방이 있는 게임”이라며 이런 뒤늦은 말바꾸기조차 부담스러워했다.

손학규는 4대강 사업을 두고도 ‘4대강 사업과 영산강 살리기 사업은 다르다’며 4대강 반대 운동의 힘을 뺐다. 전남도지사 박준영의 배신적 태도가 사실은 민주당 자체의 문제라는 걸 확인해 준 셈이다.

그래서 손학규와 민주당을 대하는 민주노동당 지도부의 태도는 매우 아쉽다.

민주노동당 지도부는 손학규가 당선하자 “환영”하고 “축하”한다고 발표했다. 손학규가 당선 후 이정희 대표를 찾아와서 “앞으로 손을 꼭 잡고 나아가자”고 하자, 이정희 대표도 “견해의 차이가 있더라도 함께할 수 있는 일을 찾”자고 화답했다.

이정희 대표가 그나마 촉구한 내용은 한미FTA 재협상에 대한 공동대응 문제였다. 하지만 한미FTA 자체를 반대해 투쟁해 온 민주노동당이 투쟁의 대상이었던 민주당의 때늦은 재협상 요구에 무비판적으로 호응하는 것은 문제다.

2007년 손학규가 한나라당을 탈당할 당시 민주노동당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결례를 뺀다고 행주가 되는 것도 아니고, 손 전 지사가 탈당했다고 한나라당의 전력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라고 날카롭게 비판했다.

이상범 전 울산 북구청장이 2007년 대선에서 손학규 지지 선언을 하자 민주노동당 지도부는 “한나라당에 충신했던 손학규 전 지사와 한나라당 대선 후보인 이명박 후보는 반노동자적 반민중적 이념과 정책에서 전혀 차별성을 느낄 수 없다”며 이상범을 출당시켰다.

그 후 손학규가 달라지지는 않았다. 18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패배하자 춘천에서 ‘침거’했을 뿐이다. 달라진 것은 민주노동당의 전략이다. 민주노동당 지도부가 반MB민주연합을 통한 연립 정부 수립 전략에 충실하면서 연합의 대상인 민주당에 대한 비판은 무뎌지고 과거를 묻지 않고 진보적 덧칠을 해 주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민주노동당 지도부는 손학규의 전력을 기억하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사람들에게 진보의 차별성을 분명히 보여 주기는커녕 도대체 진정한 진보가 무엇인지조차 흐리고 있다.

최미진

시민운동의 정치적 중립에 대해

지난 9월 30일~10월 2일에 경남 통영에서 2010 ‘시민 환경 운동가 대회’가 열렸다. 2박 3일 일정에 시민단체 활동가 1백80여 명이 참가했다.

활동가 수련회 형식으로 개최된 이번 대회에 토론 프로그램이 많은 시간을 차지하지는 않았지만 둘째 날 ‘한국의 정치 지형과 시민정치운동’을 주제로 한 토론은 흥미 있었다.

여기서는 크게 두 가지 쟁점이 토론거리로 제기됐다.

그중 하나는 시민운동이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야 하는지였고 다른 하나는 시민운동이 어떤 정치운동을 해야 하는지였다.

첫째 쟁점과 관련해 참여연대 김기식 정책위원장 등은 현재 젊은 시민운동 활동가들이 정치 문제를 지나치게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980년대 말에 시민운동을 시작한 활동가들은 단일 쟁점 위주의 운동을 하면서도 정치적 조망을 가지려 노력했는데 1990년대 말 이후 시민운동에 발을 들여놓은 젊은 활동가들에게는 이런 문제의식 자체가 없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시민운동 활동가들 사이에는 ‘정치적 중립’을 이유로 시민단체의 정치운동 참여를 부정적으로 보는 의견이 있다.

이런 의견을 두고 김기식 정책위원장은 시민단체가 지향해야 할 것은 정치적 ‘중립’이 아니라 ‘독립’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답답함을 느끼는 것은 운동 자체보다 정치 부분에서 “병목현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시민운동이 정치운동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가 말하는 정치는 대체로 선거 정치에 국한된 것인 듯했지만 그럼에도 그의 지적에는 어느 정도 공감할 만한 측면도 있다.

2008년 촛불항쟁 이후 이명박 정부에 대한 총체적 불신은 사라지지 않고 있지만 그런 광범한 대중 정서는 정치적 대안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 촛불항쟁 당시엔 그 뒤 4대강 문제에서나 민주당은 늘 동요하고 정권과 타협하려 했다. 2008년 분열 이후 진보정당들도 정제하고 있다.

1990년대 이래 크게 성장했던 사회운동 NGO들도 상당 부분 민주당 집권 기간에 민주당에 정치적으로 ‘의존’하거나 그 지도자들이 정부에 참여함으로써 인기를 잃었다. 그들이 늘 최대의 명분으로 삼은 정치적 ‘중립’이나 ‘독립’은 설득력이 떨어졌다.

사실, 한국의 사회운동 NGO들은 한나라당한테서는 정치적으로 독립적이었지만 민주당이나 열린우리당한테서도 독립적이었다고 하긴 어렵다.

따라서 김기식 정책위원장 등이 주장하는 시민정치운동의 성패는 민주당에도 독립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이 점에서 김기식 정책위원장의 ‘빅 텐트론’은 그 자신이 제기한 과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김기식 정책위원장은 지난 10여 년 동안 한국의 시민사회가 ‘분화’했기 때문에 더는 시민단체들이 정치를 외면할 수 없게 됐다고 얘기했지만 그런 분화의 핵심에는 계급 문제가 놓여 있다.

자본가 계급에 기반을 둔 민주당과의 빅 텐트론이 독립적인 시민정치운동이라는 과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인 이유다.

장호중

에콰도르

쿠데타는 실패했지만 긴장은 남아 있다

9월 마지막 주 에콰도르 경찰이 벌인 파업은 순식간에 쿠데타 기도로 이어졌다.

에콰도르 경찰은 보너스와 휴장 지급을 중단하는 내용의 공공보안법에 반대해 파업한다고 주장했다.

에콰도르 대통령 라파엘 코레아가 수도 키토에서 시위를 벌이는 경찰들과 논쟁을 벌이며 하자 경찰들은 그에게 최루가스를 뿌렸다.

코레아는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거대한 운동에 힘입어 대통령에 당선됐다. 그는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나 볼리비아의 에보 모랄레스 등 지난 10년 동안 라틴아메리카에서 등장한 급진 지도자들의 일부로 여겨졌다.

그러나 코레아는 시간이 지날수록 좌파와 우파 사이에서 균형을 취하는 정책을 폈다. 그 결과 그는 약해졌고

[좌파와 우파의] 압력을 받게 됐다.

이 날 오후 시위 경찰들은 업무 복귀를 시작했지만, 코레아는 아직 병원에 입원해 있었고 키토는 여전히 긴장된 분위기였다.

국영 언론은 우익이 쿠데타 시도를 사주했고 야당인 민주사회당과 전 대통령 루시오 구티에레스가 연관됐다는 방송을 계속했다.

코레아는 자신이 공공보안법을 철회하지 않는 이상 병원을 나갈 수 없을 거라고 경찰들이 협박했다고 말했다.

상황이 지속되면서 쿠데타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저녁 10시 군인들이 경찰에게 발포를 하면서 코레아를 구출했다.

코레아는 여전히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다. 출범 초기 코레아 정부는 외채 지불을 중단하고 보건 지출을 늘렸다.

그는 또한 미군 기지를 폐쇄했다. 미국이 쿠데타 기도를 부추겼을 가능성이 있는 이유다. 그러나 최근 코레아는 다국적 기업에 문호를 개방하기도 했다.

에콰도르 원주민 조직들은 코레아 정부와 갈등을 빚어 왔지만, 에콰도르 원주민연합(CONAIE)은 쿠데타 시도를 강력하게 비난했다.

CONAIE는 작년에 반코레아 정부 투쟁을 주도했다. 광산과 석유 산업 확대에 반대한 원주민과 비원주민 사람들은 거듭 탄압을 받았다.

CONAIE는 코레아가 에콰도르 사회운동과 동맹 관계를 맺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우익의 반정부 활동에 취약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CONAIE는 성명서에서 이렇게 말했다. “코레아 정부는 원주민 운동, 노동조합 등 조직된 부문을 주로 공격했고 우

익의 구조적 힘은 약화시키지 않았다.”

CONAIE는 광산과 석유 개발을 확대하려는 코레아의 계획에 저항하면서도, “우익이 몰래 지지한” 이번 쿠데타 기도에도 반대했다. 그들은 “진정한 민주주의가 보장되는 다민족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투쟁하겠다”고 선언했다.

2000년대 에콰도르에서는 다른 나라에 모범이 된 대중 투쟁이 벌어졌다. 1999년, 2000년, 2003년에 CONAIE를 포함하는 에콰도르 대중 운동은 신자유주의 계획을 밀어붙이려는 시도를 좌절시켰다.

원주민 조직과 노조가 결합한 이런 강력한 운동이 에콰도르의 미래를 결정할 열쇠를 쥐고 있다.

사이먼 배스캐터 영국의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크> 기자

번역 김용욱

류샤오보를 석방하라

중국 반체제 인사 류샤오보의 노벨 평화상 수상 소식은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류샤오보의 부인 류샤가 수감 중인 남편을 접견했을 때 그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이 상을 무엇보다도 헨 안먼의 순교자들에게 바친다”고 말했다.

류샤오보는 1989년 헨안먼 항쟁 당시 단식 농성에 함께했다. 이 때문에 ‘반동분자로 낙인 찍혀 2년간 옥고를 치렀다. 그는 1990년대 온건한 자유주의자로 변했지만 중국 민중에게 민주적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올바른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물론 반자본주의자가 2009년 ‘08선언’으로 드러난 류샤오보의 자유주의 정치에 전부 동의해야 하는 건 아니다(특히 사유재산제를 옹호한 것에). 그러나 중국의 권위주의적 국가에 맞서 그의 투쟁을 지지해야 한다.

그가 왜 눈물을 흘렸는지 이해가 간다. 전 세계 중국 대사관 앞에서 류샤오보 석방 시위를 벌인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한다.

류샤오보가 ‘범죄자’이므로 그에게 상을 쥐선 안 된다는 중국 정부의 논평에는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류샤오보를 비난하며 ‘중국 정부 만세’를 외친 베네수엘라 좌파 대통령 우고 차베스의 행동은 어리석다. 박노자의 입장은 차베스보다는 훨씬 낫지만, “의회 민주주의가 현존의 일당 집권보다 정말 현저히 낫다고들 생각하시나요” 하고 의문을 제기하면서 류샤오보의 민주화 요구에 시니컬한 태도를 취하는 모호한 논평을 내놓았다.

류샤오보를 이용하는 서방의 위선

그럼에도 이 논쟁의 와중에서 류샤오보에게 노벨 평화상 수상을 축하한다고 말할 수 없다. 지난해 아프가니스탄 증파를 결정한 버락 오바마에게 상을 준 이 정신 나간 노벨상 위원회에 매우 화가 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류샤오보를 제국주의 진영 간 자존심 싸움에 끌어 들였다.

류샤오보의 석방을 촉구한 ‘국제 지도자’들의 면면을 보면 불쾌감이 증폭된다. 위선적이게도 미국, 프랑스, 캐나다와 독일 등의 정부들이 류샤오보



2010년 1월 류샤오보 석방을 요구하는 홍콩 시위대

의 석방을 촉구했다.

미국을 포함해 이들은 모두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주요 파병국들이다. 프랑스 정부는 최근 경찰을 풀어 로마(집시) 이주민들의 정착지를 박살냈고, 국민의 70퍼센트가 반대하는 연금 개혁을 밀어붙이고 있다.

자신은 끔찍한 짓을 저지르면서 자기 경쟁자의 반체제 인사를 칭찬하는

서방의 위선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냉전 시절에 그것은 하나의 유행이었다. 덕분에 소련의 반체제 인사들이 잇달아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다.

그러나 오늘날 중국 인권 문제에 관한 서방의 위선은 냉전 때를 능가한다. 서방이 중국과 경쟁할 뿐 아니라 중국 소재 서방 다국적기업과 아웃소싱 등을 통해 중국 노동자들을 착취해서 엄청난 돈을 벌고 있기 때문이다.

류샤오보를 놓고 서방 지도자들이 ‘보편적 가치’ 운운하며 위선을 부리는 동안 애플, 델 등 서방의 세계적 기업에 부품을 공급하는 폭스콘 중국 공장의 끔찍한 노동조건을 폭로하는 보고서가 발간됐다.

이 보고서를 보면, 지금까지 알려진 것과는 달리 올해 들어 폭스콘 중국 공장에서 노동자 14명이 아니라 17명이 자살을 시도했고 그중 13명이 죽었다.

또, 보고서는 “노동자들은 긴 노동 시간 동안 말할 수도, 웃을 수도, 앓을

수도, 움직일 수도 없다. 그들은 매일 2만 개의 제품을 만들도록 요구받는다”고 지적했다.

서방 기업들은 이런 ‘초착취’에 힘입어 엄청난 돈을 벌었고, 류샤오보가 ‘08선언’에서 기본권의 하나로 지목한 중국 노동자들의 권리를 실현하는 데 반대했다.

최근 혼다 노동자 투쟁에서 볼 수 있듯이 중국 노동자들은 독립 노동조합 결성을 요구하며 싸우고 있다.

류샤오보를 위시한 중국 자유주의자들의 용기를 존경할 만하다. 하지만 아쉽게도 그들은 노동자들의 잠재력을 보지 못하고 있다.

중국의 진정한 사회주의자들은 민주주의적 요구들을 지지하면서도 노동계급 투쟁과 진정한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을 함께 전개해야 한다.

‘민공’을 포함한 도시 빈민과 농민의 투쟁도 지지해야 한다. 중국에서는 연속 혁명이 어젠다에 올라 있기 때문이다.

김용욱

마르크스주의로 세상 보기

윤리적 소비가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이마트가 동네 시장 품목까지 판매하면 되냐는 비판에 신세계 부회장 정용진이 “이념적 소비를 하느냐”고 조소하면서 “윤리적 소비” 논쟁이 불거졌다.

조국 교수는 ‘윤리적(착한) 소비’ 운동으로 오만한 대기업에 본패를 보여 주자고 호소했다.

오늘날 ‘윤리적 소비’(또는 ‘착한 소비’) 운동가들은 ‘나쁜’ 대기업들이 국경을 넘나들며 벌이는 불공정 거래와 착취·환경파괴 등에 분노한다. 이들은 기업 이윤보다 인권과 환경, 민주주의가 더 중요하다고 말한다.

이들이 초콜릿 회사를 비난할 때, 그것은 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 등의 카카오 농장에서 인신 매매로 팔려온 아동들이 다국적 식품회사를 위해 노예노동을 하는 현실을 고발하는 것이다.

자본주의를 변혁하려는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이런 분노에 공감한다. 이랜드 등 ‘나쁜’ 기업의 노조 탄압에 맞선 보이코트(불매운동)를 마르크스주의자들도 적극 지지하고 동참한 바 있다.

그럼에도 이들과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일차적으로 다른 점은 자본주의 기업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믿는 방법의 차이에 있다.

“소비 투표”

이들은 자본주의에서 기업들은 결국 상품 판매에 성공해야 이윤을 벌 수 있다는 것에 주목한다. 그래서 “윤리적 소비”가 기업에 진정한 압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생각은 “소비는 돈으로 하는 투표”라는 말로 요약된다. 경제 구조를 바꾸지 않고도 ‘소비 투표’로 시장을 민주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방법의 차이는 대안의 차이를 반영한다. 이들이 ‘나쁜’ 기업을 길들여 만들려는 세상은 ‘윤리적(착한) 자본주의’다.

그런데, 이 방법은 점진적 목표를 이루는 데서조차 몇 가지 난점을 낳는다.

첫째, 현실에선 ‘나쁜’ 대기업들이 필수적인 소비 시장을 지배한다. 예를 들어, 무노조 삼성의 가전 제품이 싫어 노조 탄압 LG 제품을 살 수는 없는 노릇이다.

둘째, 이윤 그 자체가 목적인 기업들은 ‘윤리적 소비 시장’도 창출해 낸다. 창업자가 극우 시오니스트고 아프리카 커피농장 착취로 대표적인 불매 대상 기업이던 스타벅스가 겨우 5퍼센트만 공정무역 커피를 쓰고도 ‘공정기업’으로 불린다!

셋째, 윤리적 소비를 하려면 대체로 더 비싼 가격을 치러야 한다. 그러다 보니 신세계 정용진을 욕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이마트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다.

반대로, 마르크스주의는 소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는 자본주의를 바꿀 수 없다고 본다.

자본주의에서 개별 기업은 시장 경쟁의 압력에 종속돼 있다. 이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생산’ 과정에서 노동자를 쥐어짜고 산업안전이나 환경 보호 등에 드는 비용을 줄여야 한다. 시장을 지배하는 ‘나쁜’ 기업들은 이 과정의 필연적 산물이다.

문제는 이 기업들의 이윤 활동이 전적으로 고용된 노동자들의 활동에 의존한다는 점이다. 이들의 노동은 자신의 임금료 말고도 막대한 부를 생산한다.

이들은 소비자로서보다 생산자로서 더 큰 잠재력을 가진다. 현대자동차 소비자 수백만 명을 모으는 것보다 현대자동차 노동자 4만 명이 파업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파급력이 크다.

따라서 진정 이윤에 타격을 줄 수 있는 것은 원자화된 소비자가 아니라 생산과정을 중단시킬 수 있는 노동자들의 집단적 행동이다. 이것만이 ‘나쁜’ 기업들이 지배하는 경제 구조를 민주적 계획이 기초가 되는 사회로 바꿀 잠재력을 가진다.

진심으로 기업 횡포가 만연한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착한’ 소비에 머물지 말고 노동계급의 집단적 투쟁을 지지하고 더 나아가 이 투쟁에 함께하는 것이 필요하다.

김문성

왜 <레프트21>은 기업 광고를 신지 않는가?

<레프트21>의 일부 독자들이 곤장 던지는 물음이다. <레프트21>의 재정 상태를 우려한 진심 어린 물음인 경우가 많다.

이 독자들도 권력과 자본의 눈치를 보지 않으려고 기업 광고를 거부하는 <레프트21>의 원칙에는 박수를 보낸다. 올해 초 광고주 삼성의 압력에 굴복해 이견희 비판 칼럼을 거부한 <경향신문>이 구설수에 올랐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언론의 독립성 문제에 민감하다.

그런 점에서 진보 언론인 <민중의 소리>가 대기업 광고를 게재하고 기업 제품홍보 기사들을 실는 것은 실용적 타협이라 할 수 있다. 그러다 보면 부지불식간에 자본에 대한 비판의 칼날이 무뎌질 수 있다.

그렇다면 소위 “착한 기업”, 즉 사회적 기업의 광고를 실는 건 어떨까?



돈을 모으는 것과 정치적 네트워크 건설을 결합시켜야 한다.

사회적 기업은 실업·빈곤·환경 파괴 등을 낳는 많은 기업들과 달리, 대체로 자선단체들이 하던 일을 시장 경제로 편입하려고 시도한다.

그러나 ‘착한 소비’, 자선 등에 호소하는 사회적 기업의 대안은 <레프트21>이 추구하는 ‘노동계급의 투쟁’이라는 해결책과 다르다.

사회적 기업은 ‘투쟁으로 정부와 사장들을 강제하기보다는 시장의 효율성을 이용해야 한다’는 생각에 근거해 있다. 이렇게 시장이 낳는 문제들을 시장을 통해 해결하자는 “착한 기업”들은 현실에서 여러 모순에 직면하게 된다. 그래서 시장주의에 도전하는 <레프트21>이 사회적 기업의 광고를 게재한다면, 그것 자체로도 독자들에게 모순된 메시지를 던지는 효과를 낼 것이다.

네트워크

무엇보다 독자들의 지지금으로 신문을 발행하려는 <레프트21>의 원칙은 재정 문제와 정치적 네트워크 건설을 결합시키기 위함이다.

이것은 오늘날 한국에선 낯설지 몰라도, 오래된 국제 노동운동의 전통이다. 러시아에서 볼셰비키는 신문을 후

원하는 사람들의 광범한 연결망을 건설했다. 러시아 혁명가 레닌은 정치적 지지를 조직하는 것과 모금을 조직하는 것을 분리시키지 않았다.

“[사회주의 신문의 성공은] 무엇보다도 월급날마다 기금이 빠짐없이 정기적으로 건히는 것에, 그리고 갈수록 많은 노동자들이 기금 정기 납부에 참여하는 것에 달려 있다. ... ‘노동자 신문에 1코페이카를’ 내는 습관을 확립하고 널리 퍼뜨리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우리는 돈과 정치를 분리시키지 않고, 정치적 네트워크와 재정적 네트워크를 결합시켜야 한다.

그래서 <레프트21>의 재정을 걱정하는 지지자들에게 신문 한 부를 더 팔고 주변 동료들에게 지지금을 조직해 줄 것을 호소한다.

박설

Report@left21.com

곳곳에서 투쟁과 저항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소식·보고 면은 작업장과 대학 등의 투쟁 소식을 나누는 장입니다. 10월 25일(월)까지 소식을 보내 주십시오.

현대차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과 대의원 선거

울산 1공장에서 “불법파견 철폐” 주장한 후보 3인 당선

현대차 사측은 비정규 3지회(울산·전주·아산)와 금속노조의 불법파견 정규직화를 위한 특별교섭 요구를 ‘교섭 대상이 아니’라며 거부했다.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현대차 부사장 강호돈은 사내하청 비정규직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경쟁력을 잃게 되며 오히려 고용이 감소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7조 원 이상의 사내유보금이 있고 한 해 순이익의 십분의 일만 투자하면 불법파견 정규직화가 가능한데 말이다.

심지어 최근에는 성호봉 당한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를 해고하고 문제가 확산되자 이를 모면하려고 관련 협력업체가 폐업했다.

이런 사측에 맞서 비정규 3지회는 주 1회 집중 집회와 출근 홍보전, 교육, 단합대회 등을 통해 저항하고 있다. 비정규 3지회 간부들은 10월 30일 전국비정규직노동자대회에 전제 조합원들이 참



10월 13일 오전 출근 투쟁 비정규 3지회는 사측이 계속 교섭에 불응하면 12월 초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가할 수 있도록 조직할 것을 결의했다.

금속노조와 비정규 3지회 간부들은 사측이 계속 교섭에 불응하면 집단 소송과 함께 12월 초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정규직 연대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그런 점에서 최근 정규직 대의원선거에서 “불법파견 철폐! 정규직 쟁취”를 내걸고 당선한

울산1공장 활동가 3인(박성락, 김철환, 신재규)은 매우 돋보인다. 3인이 모두 1차에서 당선했다는 것도 고무적이다.

3인을 비롯한 울산1공장 정규직 활동가들은 신차 투입에 따른 비정규직 우선 해고 위협에 맞선 투쟁에서 연대의 모범을 보여 승리했다. 해고를 막아냈을 뿐만 아니라 “노동강도 강화 없는 충고용 보장”을 관철시켜 10명의 인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신재규 대의원은 선거운동 기간에 “같이 일하는 형제인 비정규직 동지들이 자발적으로 노조에 가입하고 투쟁하는 상황에서 승리하기 위해 연대하자”고 호소했다. 박성락 대의원은 이경훈 지도부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지부(정규직 노조)가 적극 나선다면 대공장 이기주의의 공격도 약화시킬 수 있고 많은 비정규직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고 했다.

이경훈 지도부는 정규직 대의원선거가 끝난 만큼 이제부터 비정규직과 연대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부장 선거 때 약속한 대로 정규직·비정규직 노조를 하나로 통합하는 1사1조직을 추진해야 한다. 1사1조직이 성사되면 더 많은 비정규직이 노조로 가입해서 단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정동석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조합원

기아차

타임오프를 무력화했다는 평가는 옳다

기아차 임단투 결과를 두고 여전히 많은 논란이 진행되고 있다. <조선일보>와 주류 언론들은 기아차 잠정합의가 나오자 ‘타임오프 수용’이라는 내용으로 왜곡 보도했다.

그리고 기아차의 우파 ‘현장조직’들은 대부분 ‘금속노조에 납부하는 조합비를 납부하지 말라’며 집행부를 공격했다. 자주파 ‘현장조직’과 좌파파적 경향은 ‘편법을 사용해서 타임오프를 수용했다’, ‘주간연속 2교대를 실현하지 못했다’고 비판하며 부결을 주장했다.

하지만 조합원들은 적지 않은 찬성률로 1차 투표에서 합의안을 가결했다. 지

금까지 기아차에서는 임금과 단협이 1차 투표에서 통과된 적이 거의 없었다. 그래서 나는 일부 좌파와 경향처럼 이번 임단투 결과를 배신적 타협과 패배라고 평가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본다.

물론 이번 기아차 투쟁에 여러 아쉬운 점과 비판할 점(조합원들의 행동을 적극 조직하지 못한 점, 비정규직 단협을 의미 있게 진전시키지 못한 점, 주간연속 2교대를 실현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타임오프를 현장에서 무력화한 것과 손배 가압류와 고소·고발을 철저히 한 것은 의미 있는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사측이 비정규직에 대한 손배와 고

소·고발 문제에 대한 합의를 반복해 혼란이 있었지만 이 역시 철회하기로 재차 약속했다.

최근 기아차지부의 대의원대회에서 사측이 조합원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추가 수당으로 조합비를 인상해 전임자 임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통과됐다. 그러자 <조선일보>는 ‘타임오프가 사실상 무력화됐다’고 한탄했다. 이것은 시사적인 일이다.

타임오프가 노린 것은 노동조합 활동의 전반적인 축소와 제약이었다. 대의원들의 현장 활동을 봉쇄하고 전임자의 임금을 볼모로 노동조합을 길들여려 했던 것인데 이런 시도가 기아차에서 무력화된 것이다.

단적으로 이번 대의원대회가 3주 동안 진행됐지만 사측은 대의원들에게 어떤 제약도 가하지 못했다. 화성공장에서는 일부 감독자들이 대의원의 현장 활동을 통제하려다가 조합원들이 잔업 거부로 맞서자 부서장 등이 내려와 두 차례나 사과하는 일도 있었다.

이런 점을 볼 때 이번 기아차 임단투가 패배한 것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다.

우리가 투쟁을 평가할 때는 노동자와 자본가 사이의 세력관계와 현장의 선진적인 조합원들의 자신감 정도를 잘 이해해서 구체적인 평가를 하는 게 중요하다.

김우용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조합원

건설

이윤 지상주의가 낳은 타워크레인 붕괴 사고

10월 6일 합정동 GS건설 현장에서 또 다시 타워크레인 붕괴 사고가 났다.

타워크레인 조종사 한 명과 작업자 한 명이 아까운 목숨을 잃었다.

이번 사고는 안전에 대한 안이한 태도와 방관이 불러일으킨 명백한 인재다. 지금까지 수없이 타워가 넘어가고 공사 현장에서 사람이 죽어 나갔지만 달라진 것은 없다.

타워크레인은 자체만으로도 무게가

엄청나고 중량물을 다루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로 이어진다.

우리 건설노조 타워크레인지부는 끊임없이 안전 강화와 노후한 타워크레인 폐기, 정밀 검사의 제도화를 정부에 요구해 왔고 건설사를 상대로 투쟁해 왔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든 공사 기간을 줄이고 이윤만 창출하면 된다고 생각해 안전 문제는 신경도 안 쓰고 있다.

이번 사고도 노후한 장비를 폐기하고

정기적 정밀 검사를 했더라면 막을 수 있었다. 정부도 경제적 이익에 눈이 멀어 바주기식의 행태를 계속하고 있다.

그리고 건설업계의 최저가 입찰제와 단단계 하도급도 문제다. 이것이 건설 단가를 다운시켜 결국 노후한 장비의 유지와 임금 하락 등으로 노동자들이 그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다.

이번 GS건설은 이런 행태를 지속하며 매년 노조와 마찰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악덕기업이다. 이번 사고가 GS건설에서 일어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다.

건설 현장에서 최우선이 돼야 하는 안전이 아직도 건설사들의 이윤 지상주의 때문에 뒤로 방치되고 있다.

더는 죽음이 도사리는 불안한 건설 현장이 아닌 건설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행복한 건설 현장을 만들기 위해 투쟁할 것이다.

박기훈 건설노조 경기남부타워크레인지부 문화부장

대학 청소 노동자들

‘장밋빛’ 투쟁

지난 몇 년간 휴게공간조차 없는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청소 노동자들의 인상적인 투쟁과 반가운 승리 소식이 이어져 왔다.

올해에도 고려대, 이화여대, 동덕여대 등에서 노동자들은 휴게공간 확충과 재고용 등의 성과를 거뒀다. 동덕여대 청소 노동자들은 사측의 해고계획 철회는 물론, 기본급 인상과 시간 외 수당까지 따냈다.

류남미 공공서비스노조 미조직비정규 실장은 승리 요인으로 대중의 폭넓은 지지를 꼽았다. 그녀는 “대학 구성원인 학생들의 연대도 [승리에] 큰 구실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학생들의 연대는 원청인 학교 당국에게 실질적 압력이 됐고, 노동자들에게겐 돌도 없는 우군이었다.

실례로, 성신여대에선 전체 학생의 72퍼센트가 넘는 6천5백 명이 청소 노동자들의 투쟁에 지지 서명할 정도로 광범한 연대행동이 건설됐다.

그리고 무엇보다 청소 노동자 자신의 투쟁이 가장 중요한데, 류 실장은 “고령의 여성 노동자들이 파업에 들어가 단호하게 싸웠다”고 말했다. 덕성여대의 청소 노동자들은 학교 본관 앞 로비농성을 시작으로 총장실 점거에 들어갔고, 점거 2시간 만에 합의를 이끌어 냈다.

청소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저임금, 고용 불안정, 열악한 노동환경 등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지를 잘 보여 준다. 대부분의 대학들이 적은 예산으로 손쉽게 노동력을 구하고 관리하기 위해 파견직 비정규직을 고용하고 있다. 근본적으로 직접 고용을 이뤄내야 하는 이유다.

오는 10월 16일 서울역 광장에서 ‘따뜻한 밥 한 끼의 권리 캠페인단’이 개최하는 청소 노동자들의 ‘장밋빛 인생’이라는 노래 자랑과 축제가 열린다. 이 사회에 꼭 필요한 일을 하면서도 마치 투명한 간처럼 살아야했던 청소 노동자들의 투쟁과 승리는 계속돼야 한다.

이영일

돌봄 노동자들

노동권 보장하라

우리 사회에는 누군가의 ‘돌봄’이 없다면 불편 정도가 아니라 생명의 위협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

따라서 간병인, 요양 보호사, 보육교사, 활동 보조인 등의 노동자들은 고강도·저임금의 고통 속에서 우리 사회의 중요한 축을 지탱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 속에 국가와 사회가 담당해야 할 ‘돌봄’의 책임이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에게 떠넘겨지고 있는 것이다.

10월 16일 서울 종로 보신각에서 돌봄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을 촉구하고 정부의 사회서비스 시장화 방안에 반대하는 집회가 열린다. 이날은 돌봄 노동자들의 집단적인 힘을 보여 주는 자리가 될 것이다.

다 함께 우리의 요구를 외쳐주길 바란다. 돌봄 노동자에게 생활임금과 안정된 일자리 보장하라! 사회서비스 시장화 폐기하라! 국가와 사회가 앞장서서 돌봄 서비스 강화하라! 돌봄 노동자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저출산·고령화 대책’ 반대한다!

심선혜 공공노조 보육분과장

2010 한국기후행동캠프

운동의 성장 가능성을 보여 준다

우리는 지난 9일부터 1박 2일로 남산에서 열린 “2010 한국기후행동캠프”에 참가했다. 이번 캠프의 가장 큰 특징은 기후변화 해결책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들과, 그만큼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이다.

올해 캠프에는 1백40여 명이 참가했는데 이는 지난해보다 세 곱절 이상 늘어난 것이다.

특히 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중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이 대거 참가했다. 광주에서는 전남대학교와 조선대학교 연합동

아리 소속 회원 24명이 단체로 참가하기도 했다.

토론 주제도 다양했다. 대학이나 도시에서 에너지를 절약하는 방법들, 채식, 정부와 협력, 교육, 주민 참여 등 사회를 바꾸기 위한 수단들을 주제로 토론하기도 했고 스마트그리드, 핵발전, 탄소시장 등 정부가 내세우는 해결책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까지 총 아홉 개의 토론이 열렸다.

저녁 늦게까지 이어진 조별 친목시간에도 참가자들은 서로 다양한 의견을 거

침없이 쏟아냈다.

캠프에 참가한 다함께 활동가 다섯 명이 제기한 급진적 해결책을 캠프 참가자들 대부분이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운동의 시작에 가장 진지하고 열의있는 활동가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점은 명백했다.

참가자들은 ‘10:10 국제캠페인’의 일환으로 다음날 오전에 남산 한옥마을에서 출발해 인사동을 거쳐 안국동까지 행진을 했다. 정말 오랜만에 서울 도심에 다양한 색깔의 배너와 홍보물들이 활기

차게 행진했다.

단순한 에너지 절약 홍보 활동으로 생각한 경찰 관계자들은 “이명박의 녹색 성장은 사기다”, “4대강 말고 온실가스 감축에 투자하라” 하고 쓰인 다함께 팻말을 보고는 깜짝 놀라 팻말을 내리지 않으면 행진을 할 수 없다고 으박지르기도 했다. 경찰은 다함께 팻말만 내리면 된다고 대열을 분열시키려 했지만 행진 참가자들의 거센 항의를 받고 길을 내줄 수밖에 없었다.

김종환·장호중



서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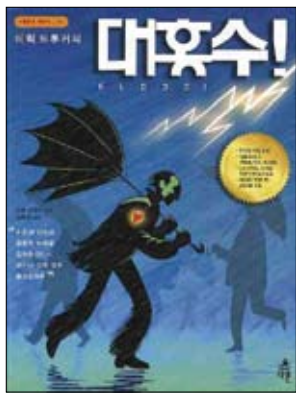
미국 자본주의에 보내는 만화 경고장

《대홍수!》는 미국의 급진적인 화가 에릭 드루커가 1992년 미국에서 출간한 장편만화로 그 해 미국 도서상 수상과 〈뉴욕 타임스〉 ‘주목할 만한 책’ 선정 등 많은 호평을 받은 작품이기도 하다.

작가는 이 작품에서 그가 오랫동안 살아 온 뉴욕을 배경으로 도시에 사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삶과 사회의 문제를 아무런 대사와 지문 없이 오직 그림만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대홍수!》는 단편 만화 세 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세 편 모두 서로 이야기는 이어지지 않지만 앞서 말한 주제로 연결돼 있다.

첫째 이야기 ‘집’은 공장 폐쇄로 실업자가 된 노동자가 고통스럽게 부랑자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과정을 가슴 아프게 그렸다. 작가는 이를 통해 세상에서 쫓겨난 사람들 개인이 아니라 경제 사회적 구조가 문제라고 말한다.

이어지는 둘째 이야기 ‘L’은 지하철을 탄 어느 한 사나이의 꿈 이야기를 다룬다. 사나이는 꿈속에서 원시 부족과 춤을 추고 노래하며 사랑을 나눈다. 어둠은 나무로 변하고 사람들은 새로 변한다. 그러나 경찰견이 으르렁거리는 소리에 잠을 깬 현실은 그와 반대다. 지하철 개찰구는 동물원과 같은 감옥창살처럼 보인다. 이러



《에릭 드루커의 대홍수!》
에릭 드루커, 다룬, 1만 4천 원, 1백99쪽

한 환상은 억눌린 도시인들이 음악, 동료, 예술에 목말라 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마지막 이야기 ‘대홍수’는 좀더 방대하고 환상적이다. 가난한 주인공 화가는 빗물이 새는 화실에서 자신을 주인공 삼아 그가 느끼는 이 도시의 슬픔과 소외, 폭력을 그린다. 이야기 말미에 소외된 자들이 시위를 벌이고 군·경찰에 맞서 온갖 악기로 저항하는 장면은 굉장히 인상적이다.

이 장면은 작가가 실제 1988년 톰킨스 스퀘어 공원에서 노숙자와 무단거주자들

을 몰아내려 한 경찰 폭력을 체험한 것을 바탕으로 그린 것이라 더욱 사실적이고 강렬하게 느껴진다.

이야기 끝은 대홍수로 종말을 향해 가지만 그 결말은 낙관적이고 희망적으로 그려진다. 이는 작가가 시민들의 연대 속에서 희망을 찾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방대한 주제를 대사와 지문 없이 그림만으로 완성했다는 것에 놀라움을 느낀다. 장면 하나하나가 이야기의 흐름을 깨지 않으면서도 각 장면을 하나의 독립적인 작품으로 느껴지게 하는 작가의 예술성과 주제를 시각화하는 능력에 감탄할 뿐이다.

전체적으로 작가가 바라보는 미국의 모습 즉, 폭력과 억압, 뒤떨린 가치관 등을 표현하기 위한 장치 설정이 매우 훌륭하다.

스크래치보드 위에 잉크를 칠하고 날카로운 도구로 긁어내는 방법으로 완성된 그림은 목판화와 같은 거친 느낌과 섬세함이 어우러져 있다. 흑백의 색상은 기묘한 분위기를 풍기게 하고 때로 함께 사용된 푸른색은 작품을 생동하게 만들어 준다.

전체적으로 이 책은 장면 하나하나 주의 깊게 볼 만한 멋진 만화책이다.

조승진

책갈피 문고 | 오늘날의 마르크스주의 08

세계화와 노동계급

신간



《세계화와 노동계급》
빌 던 · 크리스 하먼, 책갈피,
4천9백 원, 1백28쪽

책갈피 문고 | 오늘날의 마르크스주의

- 01 《자본주의의 대안과 사회주의 가치 논쟁》
(알렉스 캘리니코프 · 마이클 엘버트 지음, 이수현 옮김)
- 02 《좌파의 재구성 and 변혁 전략》
(알렉스 캘리니코프 지음, 최일봉 · 이수현 옮김)
- 03 《한국 NGO의 사상과 실천 — 마르크스주의적 분석》
(김하영 지음)
- 04 《크리스 하먼의 새로운 제국주의론》
(크리스 하먼 지음, 이수현 옮김)
- 05 《오바마의 아프파 전쟁》
(조너선 날 외 지음, 차승일 옮김)
- 06 《1989년 동유럽 혁명과 국가자본주의 체제 붕괴》
(크리스 하먼 지음, 조정환 옮김)
- 07 《부르주아 경제학의 위기》
(크리스 하먼 지음, 이정구 옮김)
- 08 《세계화와 노동계급》
(빌 던 · 크리스 하먼 지음, 최용찬 · 차승일 · 김영재 옮김)
계속 출간됩니다.

세계화 때문에 자본은 무소불위의 힘을 갖게 되고 노동계급은 무력해지지는가? 이 책은 세계화와 신경제, 탈산업화, 비물질 노동과 다중, 노동귀족 등에 관한 신화를 파헤치면서 오늘날 세계 노동계급의 현실을 살펴보고 노동운동의 전망과 과제를 모색한다. 특히 자본의 이동성과 지역 재배치, 그것이 국가의 능력, 기업 구조조정, 노동의 성격 변화에 미친 영향을 꼼꼼히 살핀다.

영화평

정말 반가운 영화 <방가?방가!>

영화 <방가?방가!>는 가난하고 ‘가방끈도 짧은’ 한국 청년이 ‘배수’ 생활에서 탈출하고자 이주노동자 행세를 하면서 일어나는 사건들, 주인공이 ‘가짜’ 이주노동자임을 들키지 않으려고 애쓰며 ‘진짜’ 이주노동자들과 관계를 맺어가는 과정을 보여 준다.

이 영화는 이주노동자들의 현실을 소재로 한 코미디 영화면서도 이들의 삶과 현실을 현실감 있고 진지하게 다룬 참 좋은 영화다. 나는 영화 러닝 타임 내내 웃고 또 웃었다.

나와 이 영화를 함께 본 이주노조 동지들은 때로는 너무 웃겨서 박장대소를 했고 때로는 이주노동자들의 현실을 너무나 잘 드러내서 ‘맞아 맞아’ 하며 킥거렸다. 다소 비현실적이라고 느껴지는 부분조차 우리의 바람과 희망을 보여 주는 것 같아 속이 후련해 기뻐서 웃어 제쳤다.

이 영화를 함께 본 이주노조 위원장 미셸 동지,

올 여름 향린교회에서 함께 농성을 한 네팔 출신 PB 동지는 주인공 태식이 이주노동자들에게 욕들의 뜻과 그 여러 ‘파생어’를 강연하던 장면을 최고의 장면으로 꼽았다. 그리고 미셸과 PB도 그 수업을 듣고 싶다고 했다!

PB 동지는 영화 속에 나온 욕들 대부분이 공장에서 매일 들었던 소리라고 했다. 그런데 “낮에는 이런 욕 들어도 참을 수 있는데, 밤 새워 일을 할 때는 몸도 너무 힘든데 욕까지 들으면 정말 참기 힘들었다”고 말했다. 이 장면은 사실 노래 가사처럼 우리가 ‘웃는 게 웃는 게 아닌’ 그런 장면이다.

이들은 이 영화가 한국에 오려는 이주노동자들에게 교육용으로 정말 좋은 영화가 될 수 있다고도 말했다. 장밋빛 환상과는 너무나 다른 이주노동자의 현실을 보여 줄 뿐만 아니라 이주노동자들이 투쟁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 주기 때문이다.

영화 속에서 이주노동자들이 공장 안에서 연좌

시위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 장면이 매우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런 투쟁은 적지 않게 일어났다. 가장 대표적으로 2002년 경기도 포천에 있는 ‘아모르가구’ 공장에서 9개 국적의 미등록 이주노동자 1백여 명이 밀린 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전면 파업을 벌여 승리했다.

또 이 영화에서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에 항의해 이주노동자들이 시위를 벌이고 행진을 하는 장면도 2002~2005년까지는 여러 지역에서 일어난 행동들이었다. 나 역시 종종 그 현장에 있었는데 그때 함께 행진을 했던 이주노동자들이 지금은 대부분 강제 추방됐다는 것이 참 씁쓸하다.

나는 이명박 정부가 이주노동자들을 대하는 방식과는 정반대의 관점으로 우리가 이주노동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게 해 준 이 영화가 너무 고맙다.

이정원 이주노조 교육선전차장



위기의 자본주의, 그 대안을 찾는 토론 공간

다함께 사회포럼에 초대합니다!

주최 | 다함께 www.alltogether.or.kr

* 웹사이트에 포럼 일정을 수시로 업데이트합니다.

* 참가비는 장소 대여 등에 사용됩니다.

서울 동부 사회포럼

격동의 유럽 - 경제 위기, 긴축정책 그리고 저항

연사: 정종남 (투기자본감시센터 기획국장)
일시: 10월 27일 (수) 오후 7시 30분
장소: 서울여성능력개발원 3층 1강의실 (지하철 2호선 건대입구역 6번 출구)
참가비: 3천 원 (학생 1천 5백 원)
문의: 010-9372-2746

서울 서부 사회포럼

우리는 왜 이주노동자를 환영해야 하는가

연사: 이정원 (이주노조 교육선전차장)
일시: 10월 27일 (수) 오후 8시
장소: 가톨릭청년회관 CYC 4층 (충대입구역 2번 출구)
참가비: 3천 원 (학생 2천 원)
문의: 02-324-3400

서울 남부 사회포럼

민주적 계획경제는 가능한가

연사: 이정구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연구교수)
일시: 10월 28일 (목) 오후 7시 30분
장소: 강남스타디 612호 (강남역 6번 출구 외환은행건물 6층)
참가비: 3천5백 원 (학생 2천5백 원)
문의: 010-2401-1987

서울 중북부 사회포럼

낙태 지역형 선고 - 낙태는 죄인가, 여성의 정당한 권리인가

연사: 최미진 (임신 · 출산 결정권을 위한 네트워크 활동가, <레프트21> 기자)
일시: 10월 28일 (목) 오후 7시 30분
장소: 대학로 한성대 예뻐센터 807호 (해학역 4번 출구 3분거리, CGV타워 건물)
참가비: 2천 원 (음료제공)
문의: 070-8113-8541, 010-8481-2626

다함께 서울지역 연락처

서울 동부지구

연락처: 02-447-0397
이메일: atge@paran.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atgeforum
사무실: 서울 광진구 중곡4동 93-49 2층

서울 서부지구

연락처: 02-324-3400
이메일: atgwestmail@gmail.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atgwestforum
사무실: 서울 마포구 동교동 174-14번지 3층

서울 남부지구

연락처: 02-416-0963
이메일: atgsouthmail@inbo.net
블로그: http://blog.naver.com/hambu_forum
사무실: 서울 송파구 삼전동 7-1 402호

서울 중북부지구

연락처: 070-8113-8541
이메일: jballtogether@gmail.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atgibforum
사무실: 서울 종로구 숭인2동 201번지 13호

우석균 칼럼

《행복한 왕자》도 금서로 지정해야 하나?



우석균 의사/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도시 한복판 높은 촉대 위에 ‘행복한 왕자’의 동상이 높다랗게 서 있었습니다. 동상의 온몸은 얇은 순금으로 덮여 있었고 두 눈은 반짝이는 사파이어였고 칼자루에는 크고 붉은 루비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되는 이 동화, 《행복한 왕자》를 읽거나 보거나 듣지 않고 어른이 된 한국 사람이 얼마나 될까? 오스카 와일드의 이 동화는 그의 《옥심쟁이 거인》이라는 동화만큼이나 전 세계 어린이들에게 사랑받는 글이다.

그런데 오스카 와일드는 동성애자였다. 《행복한 왕자》의 지은이 소개를 정확히 한다면 그가 동성애자였을 뿐만 아니라 그가 동성애자라는 사실이 밝혀져 영국에서 쫓겨나 파리에서 굶어 죽었으며 동시에 그가 사회주의자였다는 사실을 빠뜨릴 수는 없을 것이다.

그가 사회주의자였다는 사실을 떠올리면서 그의 동화들을 읽어 보라. 테리 이글턴의 말대로 “아동용 동화로 위장한 혁명전단”이 아닌가? 그런인가. 그가 동성애자였다는 사실을 상기하면서 ‘검열관의 눈’으로 《행복한 왕자》를 읽어 보라. 왜 행복한 왕자는 공주를 놓아두고 굳이 성별도 불분명한 제비와 사귀며, 또 왜 왕자는 제비에게 계속 “하룻밤만 더 있자”고 조르단 말인가.

금지

‘바른 성문화를 위한 전국연합’(이하 ‘바성연’)이라는 단체가 “〈인생은 아름다워〉 보고 게이 된 내 아들 AIDS 걸려 죽으면”이라는 광고를 〈조선일보〉에 실었다. 또 법무부는 구금시설에서 이 드라마 방영을 금지했다고 한다.

이들의 논리대로라면 이 드라마뿐만 아니라 훨씬 더 감수성이 예민한 어린이들이 읽는 《행복한 왕자》는 당연히 금지해야 한다. 동성에 작가가 쓴 글인데다가, 병에 걸려도 돈이 없어 치료를 못 받는 여성 봉재사의 아들에게 눈을 가져다주면서 공주를 비판하고, 성난팔이 소녀의 참상을 고발하고, 맘몬을 숭상하는 지배계급에 대한 직접적이고 통렬한 비판을 담은 이 동화를 왜 가만 놔둬야 하는가? 어린이들이 게이가 돼 에이즈에 걸려 죽고 빨갱이가 되려면 어찌려고?

그들이 낸 광고가 무지에 근거한 편견에 가득찬 글이라는 것은 다른 글들에서 밝혀졌으므로 (“동성에=에이즈”? ‘바른 성문화’? 무지와 편견부터

벗자!’ 〈프레시안〉, 10월 1일치) 더 자세한 언급은 않겠다. 다만 그들이 유엔을 언급하고 있으므로 유엔 AIDS계획(UNAIDS)이 ‘인권에 기초한 에이즈 접근’을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강조한다는 점을 말해 뒀자.

유엔은 물론 값싼 복제약을 놓아두고 값비싼 특허약 중심의 ‘원조’ 계획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에이즈의 최대 후원자로 알려진 게이츠 재단이 특히 이러한 특허약품 중심의 치료를 옹호한다) 효과적으로 에이즈에 대처하는 것과 거리가 멀긴 하지만, 유엔조차 약자들의 권리를 강조하는 이유는 명백하다.

여성의 권리가 억압당하면, 동성애자들의 권리가 박탈당하면 이들이 에이즈에 감염될 가능성이 더 커지는 것은 상식이기 때문이다. 여성이 자신의 의지에 따라 성행위를 거부하지 못하는 사회일수록, 또 동성에 혐오가 심해서 그들이 사회에서 내몰릴수록 이들은 ‘안전한 섹스 safe sex’에서 거리가 멀어진다.

따라서 동성애가 아니라 동성에 혐오가 문제다. 문제는 동성애자들이 아니라 ‘바성연’과 같은 동성에 혐오 집단이다. 동성애자가 에이즈 감염률이 높다면 그것은 바로 ‘바성연’과 같은 동성에 혐오증을 부추기는 사람들 탓이 크다. 동성애의 결혼이나 동거가 합법화된 유럽에서 동성애로 인한 에이즈 감염률이 가장 낮은 것은 이러한 사실의 반영이다(그리고 물론 전 세계적으로 에이즈는 이성애에 의해 주로 전염된다. 성행위를 금지시키려면 이성애부터 금지시켜야 할 것이다).

동성에 혐오증이 더욱 가시화되는 것은 일부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물론 동성에 운동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것의 반영이다. 동성애를 드라마에서 다루고 차별금지법에 ‘성적 지향’이 명문화되려는 운동에 대한 반발로 이러한 운동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때도 그렇다. 그러나 내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시기의 객관적 상황이다.

혐오증

세계경제 위기는 더욱 심각해져 가고 있고 이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소수자 탄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스웨덴에서는 이주민 혐오증을 부추기는 파시스트 정당인 스웨덴 민주당이 최초로 의석을 얻었다. 프랑스에서는 로마(집시)를 추방했고 유럽 전역에서 히잡이나 부르카 금지가 입법화되고

있다. 경제 위기와 실업이 정부와 자본의 탐욕과 무능력 때문이 아니라 이주노동자들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이미 G20을 앞두고 이미 지난 6월부터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단속추방이 대대적으로 행해지고 있고 앞으로 이슬람 국가 출신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혐오증이 공공연하게 부추겨질 가능성이 크다.

최근 미성년자에게 낙태를 시행한 의사에게 실형이 선고되는 등 낙태 금지 조처가 현실화되고 있고 프로라이프 등 이를 부추기는 세력이 힘을 얻고 있다. 저출산이 낙태 때문이라는 것이다.

동성에 혐오증 또한 이러한 흐름과 같이 볼 필요가 있다. 세 가지 모두 그 형태는 다르지만 국가와 일부 우익 사회세력의 합작에 의한 것이라는 점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경제 위기 때문에 서민들의 삶이 어려워질수록 각국 정부들은 정부와 자본에 대한 불만을 대신할 속죄양을 찾으며 동시에 민주주의적 권리를 제약하기 시작한다. 독일의 나치즘이 처음에 탄압한 것은 사회주의자, 유대인, 동성애자, ‘로마’였다. 그러나 그 파시즘의 탄압은 결국 모든 민주주의적 권리를 남김없이 압살했고 전쟁으로까지 이어졌다.

이명박 정부는 이번 개각에서 다른 사람들은 버리면서도 쌍용자동차 파업 진압이 자랑스러운 일이었다는 경찰청장 조현오를 끝까지 고수했다. 그리고 조현오는 이제 시위 진압에 고무총탄 발사기와 음향대표를 사용하려 한다.

마르틴 뮐러의 “처음에 그들은”이라는 잘 알려진 다음 글은 왜 경제 위기 시기에 민주주의적 권리의 옹호와 소수자 탄압에 항의하기 위한 연대운동이 중요한지에 대한 경고다.

“처음에 그들은 사회주의자를 잡으러 왔다. 나는 침묵했다. 나는 사회주의자가 아니었으므로 / 다음에는 노동조합원들을 잡으러 왔다. 나는 침묵했다. 노조원이 아니었으므로 / 다음에 그들은 유대인을 잡으러 왔다. 나는 침묵했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었으므로 / 다음에 그들은 나를 잡으러 왔다. 그때 나를 위해 말해 줄 사람은 아무도 남지 않았다.”

지금 우리가 연대해 민주주의적 권리를 옹호하지 않고 약자들의 권리를 지키는 일에 나서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는 《행복한 왕자》를 읽을 권리가 지 빼앗기게 될 것이다.

논설

G20을 11월 7일 전국노동자대회의 초점으로!

10월 5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 46명이 연명해 G20 항의를 위해 11월 11일에 하루 파업을 하고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자는 안전을 발의했다.

참석 대의원의 10퍼센트 이상이 안전 발의에 서명한 것은,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G20에 관심이 없다는 일각의 주장을 반박하는 것이었다(대의원대회의 자세한 보고는 〈레포트21〉 웹사이트를 보시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성원 부족으로 대의원대회가 중도 폐회되면서 이 안전은 다뤄지지 못했다. 그래서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는 11월 7일로 확정됐다.

이런 상황이므로 민주노총이 G20 개막일인 11월 11일에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기를 바랐던 이들은, 아쉽게만 G20 항의의 초점을 11월 7일로 맞춰야 할 것이다.

정부의 탄압이 예상되고 운동이 활성화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항의 동력의 핵심은 조직 노동자들이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조직 노동자들이 11월 7일을 전국 동원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G20 항의의 초점도 이동할 수밖에 없다.

한편, G20 정상회의 바로 직전에 열리는 노동자대회도 G20 같은 매우 중요한 정치적 쟁점을 대회의 핵심 요구 중 하나로 삼아야 한다.

10월 5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확인됐듯이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G20에 무관심한 것은 아니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G20에 대한 교육과 선동, 폭로를 지금부터라도 진지하게 시작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전국노동자대회가 세계 지배자들에 맞선 정치적 투쟁의 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G20에 대한 선동과 폭로는 G20 항의에 열의있는 활동가들에게 여전히 중요한 과제다.

아울러 전국노동자대회는 G20 항의를 불법 파견 정규직화, 공기업 ‘선진화’, 노조 탄압, 물가 인상 등 노동계급의 즉각적 요구들과 결합할 필요가 있다. 이런 요구들의 결합은 다양한 불만을 갖고 있는 노동자들을 공동의 투쟁으로 불러 모을 수 있다. 그리고 이런 더 큰 행동이야말로 이명박 정부와 사장들의 공세에 맞서는 노동계급의 힘을 강화할 수 있다.

행진

11월 7일 시위를 서울 도심에서 개최하고 거리 행진을 조직해야 할 것이다. 도심 집회와 거리 행진은 이명박의 “공정 사회”에 환멸을 느끼고 있는 학생들과 미조직 노동자들에게 불만의 초점을 제공하며, 저항의 희망을 보여 줄 수 있다.

지금 유럽을 휩쓰는 노동자 투쟁들은 모두 파업 투쟁과 도심 가두 행진을 결합시켜 광범한 대중을 그 투쟁의 대열로 끌어들이고 있다.

경찰청장 조현오가 11월 5일부터 갑오비상령을 내리고 시위에 대처하겠다고 천명한 마당이라 11월 7일 전국노동자대회는 집회·시위 권리 등 민주적 권리를 둘러싼 일종의 힘겨루기 시험대가 될 것 같다. 경찰의 탄압을 뚫고 시위와 행진을 성공시키는 것이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다.

항의의 초점이 11월 7일로 맞춰질지라도 G20대응민중행동이 주최하는 11월 11일 항의 시위도 정치적으로 중요하다. 막상 G20 정상회의 개막일에 아무 항의 행동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세계 지배자들의 목소리만 있고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없는 상황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11월 7일과 마찬가지로 11월 11일에도 민주노총의 동원이 중요하다. 그동안 민주노총 지도부는 11월 11일에 확대간부 총력투쟁 등을 하겠다고 말해 왔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이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11월 7일과 11일에 강력한 항의 행동을 건설해서 G20 지배자들의 경제 위기 고통전가 프로젝트에 타격을 가하자.

최영준

상설연대체

논점을 회피하는 자세로는 단결을 이룰 수 없다

10월 1일 민주노총의 제안으로 ‘상설연대체 건설을 위한 제단체 대표자 간담회’(이하 대표자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대표자 간담회는 상설연대체 건설 필요성에 대한 공감을 확인했지만 진정한 단결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놓고 진지하게 토론하는 것까지 이어지지 않았다.

민주노총 지도부와 자주계열 단체들은 “상설연대체는 계급연합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다함께의 제기에 침묵과 회피로 일관했다.

사실 그동안 민주노동당 지도부와 한국진보연대는 민주당과 연합을 위해 온 힘을 쏟아 왔다. 민주노총 지도부도 상설연대체 건설 제안문에 “범민주세력까지도 단결”시킨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사실상 민주당과 선거 연합을 염두에 둔 표현이다.

한국진보연대의 한 활동가는 “계급연합 문제는 진보정당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 상설연대체 건설을 위한 논의에서 제기할” 쟁점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민주당과 하는 연합은 진보정당이 말고 대중투쟁은 상설연대체가 맡는다는 전형적인 ‘양날개론’이다. 그러나 민주노동당 등 상설연대체 건설에 주도적인 단체들이 계급연합을 추구하는 상황에서 상설연대체와 계급연합이 무관한 문제일 수 없다. 의회 정치와 대중 운동의 이원적 전개는 둘 모두를 약화시킬 것이다.

민주노동당 간부들을 비롯한 자주계열은 민주

당이 비정규 약법 제정, 이라크 파병, 한미FTA 추진 등을 공개적으로 반성하고 태도를 바꾼 적이 없음에도 연합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이것은 선진 노동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결정적 국면에서 투쟁에 찬물을 끼얹는 효과를 낳다.

진보정당이 자본가 정당인 민주당과 연합하는 일에 매달릴수록 노동자 투쟁을 자제시키고 투쟁의 요구를 민주당 수준으로 낮추는 효과가 난다. 그래서 공동 투쟁과 계급적 단결을 목표로 한 상설연대체는 계급연합과 분명한 선을 그어야 한다.

그런데 이번 대표자 간담회에는 민주노총의 제안으로 김영대 국민참여당 최고위원이 참석하는 여처구니없는 일이 있었다. 민주노총은 제안문을 보내는 과정의 실수였다고 나중에 해명했지만 “국민참여당도 상설연대체 참관을 허락해 달라”는 김영대 최고위원의 요청을 김영훈 위원장은 그 자리에서는 분명히 거절하지 않았다.

민주노총은 이후 상설연대체 집행책임자 회의에서 “진보진영의 상설연대체 건설 논의에 국민참여당 참관은 허락할 수 없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계급연합 문제에는 침묵하고 있다.

구동존이

한편, 진정한 단결을 위해서는 상설연대체 안에서 여러 정치경향이 자기네 고유의 이데올로기를 고집하지 않는 것도 필요하다. 그러나 그동안 자

주계열은 ‘민족 자주’로 표현되는 민족주의 이데올로기를 양보하려 들지 않았다. 마치 ‘민족 자주’는 진보진영이 당연히 수용해야 할 강령 아니냐는 식이다.

그러나 ‘민족 자주’는 자본주의적 민족주의를 포함한다. 가령, 자주계열(특히, 민주노동당 지도부)은 중국 정부의 점령 정책에 맞선 티베트인들의 저항을 지지하기보다 ‘민족 자주’ 이데올로기를 적용해 “중국 정부에 내정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태도를 취했다. 피억압 민족의 해방 요구는 마르크스주의의 주요 과제다.

다함께는 한국진보연대 결성 당시에도 ‘민족 자주’가 아니라 제국주의 반대 또는 강대국의 패권 정책 반대 등으로 바꾸자고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대표자 간담회에서도 한국진보연대를 비롯한 자주계열은 다함께의 문제제기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자주계열은 “1년 내내 상설연대체 제안만 하고 있다”고 불평만 늘어놓았다.

결국 대표자 간담회에서 유일하게 합의한 것은 10월 19일 “기간 연대운동의 평가와 과제, 새로운 상설연대체의 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이다.

10월 19일 토론회는 문화 행사가 아니라, 상설연대체가 진정한 단결을 이루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심각하게 토론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



정부와 기업의 후원을 일절 받지 않고, 독자·지지자들의 후원으로 운영하는 신문

〈레프트21〉을 후원해 주세요

후원회원 가입하기 문의 02-777-2792/ left21@left21.com/ www.left21.com
후원하기 계좌번호 (명의: 레프트미디어) 하나은행 296-910007-15804, 국민은행 020601-04-080896,
우리은행 1005-301-422382, 신한은행 140-008-401399, 농협 301-0010-1643-71
웹사이트(www.left21.com)를 방문하시면 신용카드 결제, 핸드폰 결제, ARS결제도 할 수 있습니다.

레프트21

프랑스 10월 12일 총파업

3백50만 명이 우익 정부에 맞서 시위를 벌이다

프랑스노동총동맹(CGT)는 10월 12일 프랑스에서 3백50만 명이 2백여 군데에서 행진에 참가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투쟁은 연금 개악 반대 투쟁의 새로운 정점이었다. 지금 프랑스에서 벌어지는 투쟁은 매우 중요하다. 이 투쟁은 전 유럽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6월부터 연금 개악 반대 투쟁이 시작됐는데, 10월 12일 투쟁은 네 번째 대규모 파업과 투쟁의 날이었다. 이날 시위 대열의 규모는 매우 컸다.

- 파리 에펠탑은 문을 닫음
- 파리 - 33만 명
- 마르세유 - 23만 명
- 툴루즈 - 14만 명
- 루앙 - 7만 5천 명
- 카앵 - 4만 명
- 그르노블 - 7만 5천 명
- 렌스 - 6만 명
- 리옹 - 4만 5천 명

민주노동자총연맹(CFDT)은 “예전 행진의 날에 비해 시위대의 규모가 15퍼센트에서 20퍼센트 정도 더 컸다”고 말했다. 또, 대다수 산업에서 파업 참가자 수가 예전 하루 총파업 때보다 훨씬 더 많았다.

쉬드[연대단결민주]노조 소속 체신노조의 우체국 노동자들은 이렇게 선언했다. “국민의 요구에 묵묵부답인 사르코지 정부의 완고함에 맞서 우리는 더 큰 압력을 넣어야 하며, 나라를 뒤엎을 수 있는 우리의 힘을 사용해야 한다.”

사회당 당수 마르틴 오브리는 이렇게 말했다. “오늘 시위는 매우 컸습니다. 개악 반대 운동은 커지고 확대되고 있습니다. 프랑스가 오랫동안 경험하지 못한 대규모 시위 물결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날 투쟁의 중요한 특징은 단

지 시위 참가자의 수만이 아니다.

철도 노동자, 발전 노동자, 금속 노동자, 항만과 정유소 노동자 등 많은 노동자 집단이 10월 12일 이후에도 파업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또 다른 중요한 움직임은 학생들이 이 운동에 결합한 것이었다.

이런 움직임이 조직적으로 확산된다면 대중 행동을 지속적으로 건설하고 궁극적으로 승리를 쟁취하는 토대가 될 수 있다.

우익 대통령 니콜라 사르코지는 정년을 62세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연금을 전액 수령하려면 67세까지 일해야 한다. 노동자들의 연금 보험료도 늘어날 것이다.

현재 의회 최종 승인을 앞두고 있는 이 ‘개혁’은 사상과 은행가들이 초래한 위기의 대가를 노동자들이 치르게 하려는 프랑스 지배자들의 시도를 상징하는 것이다.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70퍼센트가 파업과 시위를 지지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사르코지 정부는 아주 작은 양보만을 했을 뿐이다. 그러나 이제 파업을 멈출 수 없는 물결로 확산시킬 수 있는 강력한 아래로부터 압력이 존재한다.

멈출 수 없는

CGT 금속노조 위원장 장 피에르 들라노이는 조합원들이 “거리를 그냥 행진하는 것”에 지쳤다고 말했다.

그는 화요일[10월 12일] 이후 파업의 지속 여부를 지역 지부들이 결정하게 한 CGT 지도부를 비판했다.

“이따금 양떼처럼 모여서 시위를 벌이는 것은 올바른 투쟁 방법이 아니고 결국 패배할 것이다. 운동을 강화하고 강력한 행동을 바라는 기층 노동자의 목소리를 무시하면 안 된다.



사진 출처: Flore Graud

10월 12일 리옹에서 벌어진 시위에 참가한 학생들이 이 투쟁은 전 유럽의 계급세력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

“만약 우리가 패배한다면 프랑스의 노동조합 운동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지속적인 행동만이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라 브와 뒤 노르〉는 최근 총파업 지속 안건을 상정한 한 노조의 총회 광경을 보도했다. “찬성하시는 분? 모두 손을 들었네요. 반대하시는 분? 아무도 손을 안 들었군요. 기권은? 역시 아무도 없군요.”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무기한 파업이 시작됐다.

여름부터 마르세유 항구는 격전지였다. 크레인 조종사, 터미널 노동자, 항만 노동자 등은 민영화와 연금 개악에 맞서 파업을 벌여왔다.

포-라베라에 있는 세계에서 셋째로 큰 석유 터미널이 파업으로 큰 영향을 받으면서 코르시카와 프랑스 일부 지역이 석유 공급 부족을 겪었고 지중해 지역이 해상 수송에서 문제를 겪고 있다.

항만노조 위원장 피에르 브로사는 〈소

셜리스트 워커〉에 이렇게 말했다. “더 많은 이유를 위해 우리 생활수준을 낮추려는 데 동의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힘든 육체 노동을 합니다. 어느 날 쓰러질 때까지 일할 생각은 없습니다.

“조합원들이 이번 파업을 주도했습니다. 그들은 승리할 수 있는 행동을 바랍니다. 곧 경제를 마비시키고 사장들의 숨통을 쉴 수 있는 지속적 파업, 지속적 총파업을 바랍니다.”

강력한

마르세유 곳곳에서 파업 열기를 확인할 수 있었다. 모노프리 슈퍼마켓[프랑스 초대형 슈퍼마켓 체인] 노동자들은 9월 17일부터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임금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이고 있다.

그들은 최근 연금 개악 반대 시위에 참가해 “우리는 지지하지 않았다”고 외치며 투쟁 의지를 불살랐다.

학교 식당 노동자들도 임금과 연금 개

악에 반대하며 2주째 파업을 벌이고 있다.

곳곳에서 지역 쟁점과 연금 개악 반대 투쟁이 결합되면서 강력한 혼합물이 형성되고 있다.

지속적 파업은 1995년 알랭 쥐페의 연금 개악 시도를 좌절시켰다.

당시 [하루] 총파업은 대중의 정서를 보여 주는 계기였다. 그러나 철도 노동자들이 수주 동안 파업을 지속해 정부에 지속적으로 압력을 넣은 것이 굴복을 이끌어 내는 데서 결정적이었다.

지금 비슷한 승리를 얻는다면 전 유럽 노동자들의 반격에 힘을 줄 것이고 노동자들이 경제 위기의 대안을 제시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것이다. 즉, 사장들이 경제 위기의 대가를 지불하고 이윤이 아니라 사람이 먼저인 체제를 지향하는 그런 대안을 말이다.

찰리 킴버 영국의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편집자

번역 김용욱

국가고용전략 2020

이명박 정부의 대(對) 노동계급 선전포고

정부가 최근 ‘국가고용전략 2020’을 발표해 비정규직을 대폭 늘리고 노동자들의 조건을 공격하겠다고 선언했다. 주된 내용은 ‘노동유연성 확대’와 ‘고용·비정규직 관련 규제 완화’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공정하고 역동적인 고용을 창출”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세부 계획을 보면 전부 노동자들에게 해로운 것들이다.

청소·경비 업무와 신설 기업에서 2년 이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불가능하게 하고 영업·경리사무 등에도 파견근무를 합법화하는 것, 탄력적 근로시간제 적용을 확대하고 그 기간도 3개월에서 1년으로 대폭 연장하는 것, 50세 이상 노동자들의 임금을 절반으로 삭감하는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고 공공부문에서 시간제 도입 등 유연근무제를 시행하겠

다는 것 등이 포함돼 있다.

이 모든 것은 “일자리를 늘리고 ...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전략”(고용노동부 장관 박재완)이 아니라, 비정규직만 늘리고 노동자들의 삶을 파괴할 전략이다.

정부는 이번에도 어김없이 “대기업·정규직의 고용 경직성”을 비난하며 유연노동과 임금피크제 등을 정당화했다.

그러나 이것은 뻔뻔스런 적반하장이다. 공공부문 취업자 수가 지난달에만 21만 4천 명이나 줄고, ‘공공부문 선진화’ 정책으로 공기업 정원이 대폭 축소된 것을 보라. “일자리 창출의 걸림돌”은 바로 정부 자신이다.

더구나 ‘대기업·정규직의 고용 경직성’은 우리 모두가 지켜 내고 다른 부분

으로 확대시켜야 할 가치다.

그러나 긍정적인 측면으로 얘기되는 ‘사내하도급·건설 노동자 고용개선 방안’에도 근본적인 대책은 포함되지 않았다.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처지 개선을 위해선, 당장 현대차 불법파견 노동자들부터 전원 정규직화해야 한다.

건설 노동자들의 임금·노동조건 개선책은 내놓지 않은 채, “외국인력의 규모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식으로 이주노동자들에게 일자리 부족의 책임을 돌리는 것도 심각한 문제다.

이런 일자리 ‘파괴’ 대책은 폐기돼야 마땅하다.

노동자 운동은 양질의 공공부문 일자리 대량 창출과 고용안정 등을 요구하며 이명박의 노동유연화 정책에 맞서야 한다.

박설

레프트21을 정기구독하십시오

여러분의 정기구독과 후원으로
지난 1년 반 동안 기업 광고 전혀 없이
발행할 수 있었습니다.

정기 구독료(우편료 포함)
1년(26개 호) 5만 원
2년(52개 호) 10만 원

임금 계좌
하나은행 296-910007-15804
국민은행 020601-04-080896
우리은행 1005-301-422382
신한은행 140-008-401399
농협 301-0010-1643-71
예금주 (주)레프트미디어

구독 기간 중에 구독료나 우편료가
올라도 추가 부담이 없습니다.

레프트21에서 접한 진실을 널리 전하고 싶다면,
한 부를 더 구입해 주위에 소개해 주세요.
자본과 권력에 맞선 저항의 네트워크를 만드는 길입니다.